
2025년 경제정책방향

2025. 1. 2.

관계부처합동

순 서

I . 최근 경제상황 평가	1
II . 2025년 경제여건 점검	2
III . 2025년 경제전망	4
IV . 2025년 경제정책방향	5
1. 민생경제 회복	6
2. 대외신인도 관리	28
3.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	37
4. 산업경쟁력 강화	41
※ 역동경제 중점 추진과제	57
[별첨1] 상세 경제전망	61
[별첨2]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	71

I. 최근 경제상황 평가

□ 물가는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, 경기는 하방위험 커진 모습

○ 경기는 '23년 하반기 이후 회복흐름을 시현했으나, 최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회복경로의 불확실성 확대

* 경제성장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1Q)1.1 (2Q)1.0 (3Q)1.4 (4Q)2.1 ('24.1Q)3.3 (2Q)2.3 (3Q)1.5

▪ 내수 회복속도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더딘 가운데,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도 성장기여도가 점차 축소

* 통관수출(전년동기비, %): ('24.1Q)8.0 (2Q)10.1 (3Q)10.5 (4Q)4.2

* 수출 성장기여도(전기비, %p, 재화+서비스): ('23.4Q)1.8 ('24.1Q)0.6 (2Q)0.5 (3Q)△0.1

○ 물가는 유가하락 등 공급측 요인 완화로 최근 2% 이내 안정세

*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, %): ('24.1Q)3.0 (2Q)2.7 (3Q)2.1 (4Q)1.6

○ 고용은 건설업 감소세가 지속되며 2분기 이후 증가속도 조정

* 취업자수 증감(만명, 전년비): ('24.1Q)29.4 (2Q)14.6 (3Q)14.6 (10)8.3 (11)12.3

□ 산업·통상환경 변화,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 상존

○ 국가간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, 보호무역 확산·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 변화 가속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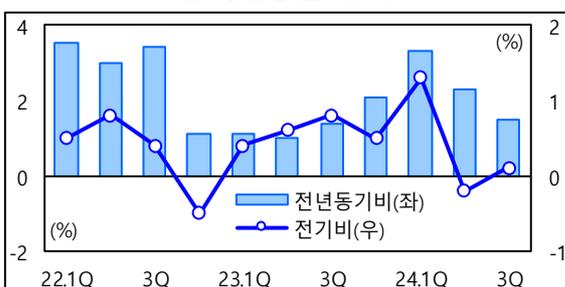
* 글로벌 무역규제조치(건, IMF<23.6월>): ('10)292 ('15)649 ('20)1,716 ('22)2,845<'10년 대비 10배 증가>

○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, 최근 총요소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며 1%대 잠재성장률 진입 목전

* 잠재성장률(%), 연평균, 한국은행: ('16~'20)2.6 → ('21~'23)2.1 → ('24~'26)2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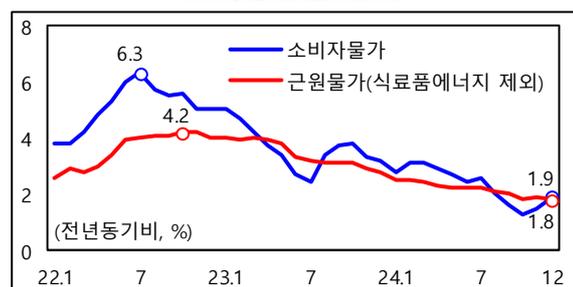
↳ 요소별 기여도(%p): (총요소생산성)1.5→0.7→0.7 (자본)1.6→1.4→1.1 (노동)△0.4→0.1→0.2

경제성장률 추이



* 출처: 한국은행

물가상승률 추이



* 출처: 통계청

II. 2025년 경제여건 점검

◇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,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며 민생 어려움 지속 예상

1 경기 여건

□ (대외) 고물가·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, 세계경제 불확실성 상당

○ 세계경제는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,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전환이 중요 변수

* '24→'25년 세계경제 전망(% IMF<'24.10월>): (성장)3.2→3.2 (교역)3.1→3.4 (물가^{선진국})2.6→2.0
↳ 美 정책변화 양상(관세·이민) 등에 따라 '25년 세계성장률에 최대 △0.8%p 영향(IMF, '24.10월)

○ 향후 주요국 통상·산업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·공급망 환경 변화 등이 세계 성장·교역경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

□ (대내)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, 수출 증가속도는 둔화

○ 내수는 고물가·고금리 등 제약요인 완화로 점차 개선 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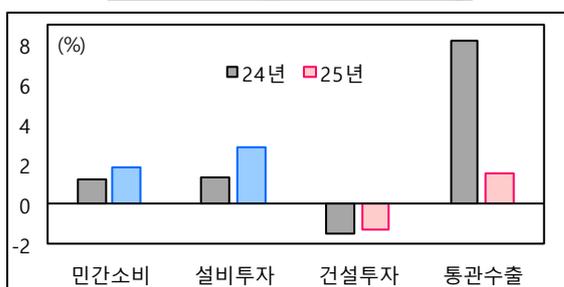
* 실질소득(전년동기비, %): ('23.3Q)0.2 (4Q)0.5 ('24.1Q)△1.6 (2Q)0.8 (3Q)2.3

▪ 다만, 건설경기 회복 시점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가계·기업심리 영향 등 불확실성 상존

* 건설수주(전년동기비, %, 경상): ('23.上)△23.3 (下)△13.6 ('24.上)2.9 (3Q)27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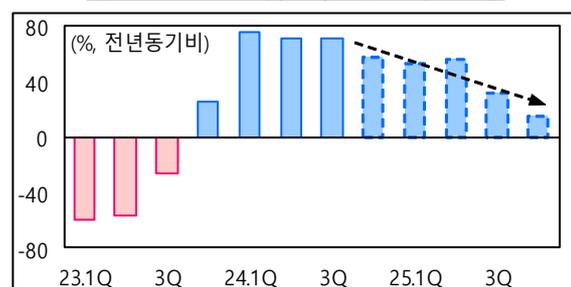
○ 수출은 반도체 업사이클 조정, 경쟁 심화, 향후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 감안 시 '24년보다 증가폭 둔화 전망

'24→'25년 컴포넌트별 전망



* 출처: 자체 추정

글로벌 반도체(D램) 매출액 전망



* 출처: Gartner

2

금융·외환시장 여건

□ 최근 확대된 시장 불확실성이 '25년에도 지속될 전망

-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,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최근 들어 금융·외환시장 변동성 확대

* 코스피(pt, 기말): ('24.7)2,771 (8)2,674 (9)2,593 (10)2,556 (11)2,456 (12)2,399

* 원/달러 환율(기말): ('24.7)1,377 (8)1,336 (9)1,308 (10)1,380 (11)1,395 (12)1,473

- '25년에도 美 통상정책 전환, 주요국 금리경로, 지정학적 긴장 등 전개양상에 따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

3

민생 여건

□ 복합위기 후유증과 경기흐름 약화로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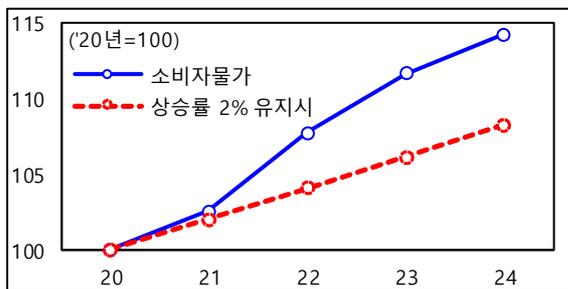
-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,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, 누적된 고물가 영향에 따른 생계비 부담 여전

* 국제유가 전망(\$/b, 두바이유, 자체 추정): ('24)80 → ('25)73 <전년비 △9%>

-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, 건설 부진·수출 둔화 등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며 어려운 여건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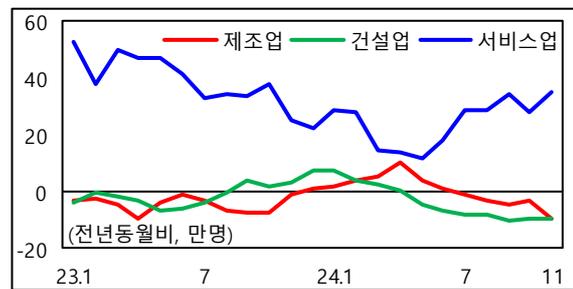
* 생산연령인구 증감(만명, 장래인구추계): ('23)△17.1 ('24)△24.4 ('25)△41.6

'20년 대비 누적 소비자물가 추이



* 출처: 통계청

산업별 취업자수 증감



* 출처: 통계청

◇ '25년은 어느 때보다 확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경로, 금융·외환 시장과 민생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

☞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,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

Ⅲ. 2025년 경제전망

	2024년	2025년
▪ 경제성장률(%)	2.1	1.8
▪ 취업자증감(만명)	17	12
- 고용률(%, 15세 이상)	62.7	62.8
▪ 소비자물가(%)	2.3	1.8
▪ 경상수지(억불)	900	800
- 통관수출(%)	8.2	1.5
- 통관수입(%)	△1.6	1.6

① (성장) 수출을 중심으로 '24년보다 둔화 전망(2.1→1.8%)

-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,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 둔화 예상

* 메모리반도체 매출전망(전년비, %, WSTS): ('23)△28.9 ('24^e)81.0 ('25^e)13.4

- 내수는 고물가·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·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,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 지속

② (고용)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,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'24년(17만명)보다 축소된 12만명 전망

- 고용률은 여성·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 지속

③ (물가)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'24년(2.3%)보다 낮은 1.8% 전망

- 다만, 기상여건,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상존

④ (경상수지) '24년(900억불)보다 흑자폭 축소(800억불) 전망

-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지만,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 지속

IV. 2025년 경제정책방향

정책 목표

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
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

4대 정책 분야

민생경제 회복

경기

- ✓ 경기보강 강화 + 민생 신속지원
- ✓ 소비·건설 등 부문별 활력 제고

민생

- ✓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
- ✓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
(청년·중고령층·소상공인·취약근로자)

대외신인도 관리

- ✓ 금융·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
국제사회 소통
- ✓ 자본시장 선진화
- ✓ 외국인 투자(FDI) 촉진
- ✓ 잠재리스크 관리

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

- ✓ 新대외경제전략 추진
- ✓ 전략적 수출 지원
- ✓ 공급망 안정

산업경쟁력 강화

- ✓ 주력산업 혁신
- ✓ 유망 신산업·서비스업 경쟁력 제고
- ✓ 핵심인프라 확충(전력·인재 등)
- ✓ 투자환경 개선 및 중소·벤처 활성화

※ 역동성 회복 강화 노력 지속

추진 방식

- ①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
- ② 국회·민간부문과 소통·협력 강화
- ③ 즉각적 Action + 대응 Frame 구축 병행

1

민생경제 회복

1

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

(1) 획기적 경기보강

① **총 18조원 규모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뒷받침**
 (재정·공공 추가투자 +6조원, 정책금융 +12조원)

재정	연초부터 주요 사업 기금계획을 +2.5조원 수준 확대 변경
세제	탄력세율(자동차 개소세 인하)·할당관세(먹거리) 인하 등 세제지원 병행
공공기관	'25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+2.5조원 확대(63.5→66.0조원)
민투	최근 5년 평균 대비 '25년 +1조원 수준 초과 집행 추진(4.3→5.2조원)
정책금융	수출지원, 중소·중견기업 투자 뒷받침 등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'24년 대비 +12조원 확대(599→611조원)

② **민생 신속지원: 전례없는 규모·속도의 신속집행 + 체감도 제고**

【 1. (규모) 역대 최대 상반기 신속집행, 전년비 5+ α 조원 확대 】

- (중앙·지방) 역대 최고 수준의(중앙 67%, 지방 60.5% 내외)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(전년대비 5+ α 조원 확대)
- 85조원 수준 민생·경기 사업은 상반기 70%(1분기 40% 이상) 집행
- (공공기관) 중앙·지방공공기관도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 집행을
(중앙 57%, 지방 58%) 달성을 목표로 철저한 집행관리 추진

【 2. (속도) 집행 가속화를 위해 가용 수단 총동원 】

- 역대 최대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(11.6조원), 집행규정 적극 완화, 사전절차 단축, 맞춤형 홍보 등 활용해 최대한 당겨집행
- 국가·지방계약 한시특례 연장('24.12 → '25.6)으로 집행 뒷받침
 * 입찰·계약보증금 인하, 검사·대가지급 기간 단축, 선금지급한도 확대(70→100%) 등

【 3. (체감) 연초부터 국민에 절실한 민생지원 체감도 제고 】

- 수혜대상별 체감도 높은 사업을 선별, 연초 조기착수 집중관리

☞ 美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, 경제지표 흐름, 민생경제 상황 등 감안해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중 재점검,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 강구

[Box1] 민생 신속지원 주요 사업 사례

일정 (주차)	사업명	주요 내용	수혜인원 (연간)	지원 최초수령일 (수혜자 기준)	
				'24년	'25년
1월					
1 주	▶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	• 직업훈련생 훈련수당(월 최대 31.6만원) 지원 *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	4.5만명	1.19	1.3
	▶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	• 취업청년 지원금(2년 480만원) 지원 *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	10만명	1.12	1.3
2 주	▶ 농축수산물할인지원	• 최대 (농축)40% (수)50% 할인 *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	2,842만명	1.11	1.9
	▶ 노인일자리	• 사회서비스형(월 76만원) 등 *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	109.8만명	2.1 (착수)	1.10 (착수)
	▶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상향	• 디지털상품권 할인폭 10→15% * 사업착수시기 조정	374만명	-	설 연휴 18일前 (1.10)
	▶ 일반국도건설	• 국도 신설 및 확장·개량 *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, 국비 선지급	91개소	1월3주	1월2주
	▶ 하수관로 정비	• 하수관로 정비 지자체 보조 *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, 국비 선지급	667개소	2월4주	1월2주
3 주	▶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	• 출퇴근 교통비(월7만원 한도) 지급 * 사업 집중 홍보 및 교통비 사용 독려	1.3만명	1월5주	1월3주
	▶ 소상공인지원용자	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* 사업착수시기 조정	7~8만명	1.26	1.15
	▶ 철도안전시설시스템 개량	• 노후 철도시설·시스템 개량 * 회계연도 개시 전 착수계약 체결, 신규사업 발주 전시행	노후시설 8천 개소	2월3주	1월3주
4 주	▶ 무공해차 보급	• 전기차·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* 지급기준 조기확정,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	33.9만대	2월4주	1월3주
	▶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용자 신설	• 최근 국내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13개 업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용자 * 1월 한달간 집중신청, 선정위원회 수시개최	150개사	-	1월4주
	▶ 자활사업	• 기초수급자 일자리 제공 등 자립 지원 (시정진입형 기준 월 6.4만원) * 사후지급을 일부 선지급으로 변경	7.2만명	1.31	1.24
5 주	▶ 영구임대시설개선	• 2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시설 보수 * 대상확대, 공사발주 조기 개시	14만가구	4월1주	1월5주
2월					
2 주	▶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	• 경영개선, 폐업지원금, 재창업 등 지원 * 조기 공고	10만명	2월4주	2월2주
3 주	▶ 청년주택드림대출	• 분양가 80%, 최저 2.2% 구입자금 대출 * 유튜브 홍보·관계기관 협의로 1분기내 조기출시	1.1만명	-	2월3주
	▶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지원	• 배달·택배비 30만원 지원 * 온라인 신청 시스템 마련, 영수증 검증 후 자동 지급	67.9만명	-	2월3주
4 주	▶ 우수 신진 연구자 지원	• 연구과제 지원 * 신규과제 공고·접수 조기 완료	1,947명	4월1주	2월4주
	▶ 세종과학 펠로우십	• 대학 학기에 맞춰 연구비 지급	1,208명	5월1주	2월4주

(2) 소비 활력 제고

① 세제·재정 인센티브 확충, 소득보강을 통해 소비회복 촉진

① (추가소비 소득공제) 상반기 추가소비분(전년대비 5% 이상)에 대한 20% 추가 소득공제 추진(별도한도 100만원)

② (내구재 소비촉진) “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” 시행

① (자동차) 상반기(1.3.~6.30. 출고분) 한시로 개소세 30% 인하
(5→3.5%, 100만원 한도)

※ [예시] 4,000만원(개소세 과세전 기준) 상당 국산 중형 SUV 구매시, 총 △70만원 세제혜택
- ①개소세 △49만원, ②교육세 △15만원(개소세 30%), ③부가세 △6만원(개소세·교육세 합산 10%)

-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감면 추진(△70%, 100만원 한도)

② (전기차) '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연초 신속 시행
(25.1.2. 발표)하고, 기업 할인시 보조금 추가지급 한시 확대(~25.6)*

* [現] (기업할인 0~500만원) 20% 추가지원 (한도 100만원)
[改] <일반형^{4,500만원↑}> (기업할인 0~500만원) 20% 추가지원 (기업할인 500만원^{초과분}) 40% 추가지원(한도 無)
<보급형^{4,500만원↓}> (기업할인 0~200만원) 20% 추가지원 (기업할인 200만원^{초과분}) 40% 추가지원(한도 120만원)

※ [예시] 4,400만원 상당의 전기차에 대해 업계가 400만원 할인시,
520만원 할인효과 발생(업계할인: 400만원 + 정부 추가보조금: '2480→'25120만원)
[추가 기대효과]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발표시기를 앞당겨(기존 2월 → 1월초)
통상 1~2개월간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 최소화

③ (가전)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지원을 확대

* 환급률 상향: [가 유형(장애인·독립유공자·기초생보 등)] (現) 20% → (改) 30%
[나 유형(다자녀·출산가구·대가족 등)] (現) 10% → (改) 15%

※ [예시] 다자녀가구가 에어컨(200만원) 구매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금 확대

③ (소득 보강)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 관련 세제(통합고용세액공제 등) 개편* 추진

* '25년 일몰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

▪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흐름 영향 등 검토를 거쳐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(현행 세율 3%) 개선

② ① 국내관광·② 방한관광·③ 관광인프라 등 3대 분야 관광붐업 촉진

【 1. 국내관광 촉진 】

① (쿠폰·휴가지원) 비수도권 숙박쿠폰(최대 3만원)을 100만장 신규 배포

-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*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(現 6.5 → 改 15만명, 기금변경)하고, 상반기 조기사용 적극 유도

* 근로자(20만원)·정부(10만원)·기업(10만원)이 분담해 총 40만원 국내여행 경비 지원

- '여행가는 달'을 조기시행(6 → 3월)하고, 정부·지자체, 공공기관·지방공공기관의 국내휴가 활성화와 국내 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

② (제도개선)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 요건 완화*를 추진하는 한편,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** 마련

* 면적 제한 폐지(230㎡ 미만 → 조례로 지정), 식사제공 허용(조식 → 석식도 가능) 등

** 현재 숙박업은 호텔업, 휴양콘도미니엄업, 일반숙박업 등 20여개 유형으로 세분화

【 2. 방한관광 활성화 】

① (출입국 편의) K-ETA 한시면제기간을 1년 연장(~'25.12)하고, 단체객 일괄신청 시스템 구축('25.1월 시행)

- 中 단체객 한시 무비자 시범시행(일정 범위 내)을 적극 검토하고, 동남아 등 6개국* 단체객은 비자발급수수료 한시면제 연장(~'25.12)

* 중국, 베트남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인도

② (프로모션) 대대적인 방한관광·소비행사를 연초부터 릴레이로 개최해 지속적 소비 붐 조성

① 코리아그랜드세일(1.15~2.28)을 설 명절과 연계, 방한관광 붐업 추진

* 방한 항공권 최대 94%, 백화점·면세점·편의점 최대 10% 할인, 면세 최대 30% 추가 환급 등

② 동행축제는 '미리온 동행축제(3월)'를 시작으로 연 3회 이상 개최

③ 국제미식행사 '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' 국내 개최(3월)

④ 듀티프리페스타 연 2회 개최(4·10월)와 함께 기간 확대(40 → 60일)

* 대형 한류행사인 '비욘드 케이 페스타(6월, 신설)와 연계해 시너지 창출

⑤ 코리아세일페스타(11월)를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

【 3. 소규모 관광단지 등 지역 관광인프라 대폭 확충 】

① (관광인프라)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* 본격 시행('25.4), 복합 시설지구 유형** 신설(상반기) 등 맞춤형 관광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

* [지정규모] 50만㎡ 이상 → 5~30만㎡ / [승인권자] 시·도지사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

** [現] 용도가 같은 시설 2개 이상만 가능 → [改] 용도가 다른 시설 2개 이상도 가능

▪ 1조원 규모 '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' 추진('25년 2개소 선정)

② (관광기업 지원) 관광기금 용자 및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 확대

* [용자] ('24)5,365→('25)5,865억원 / [펀드 출자] ('24)200→('25)330억원

▪ 관광단지 민간 사업시행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간(최대 50%, ~'25) 연장 검토

▪ 호텔업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한 번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기준·배점 통합(상반기)

* [現] 평가기준 4단계(1,2,3,4,5성급)로 희망성급 점수 미달시 재평가

[改] 2단계(1~3성급, 4~5성급 평가표 2개)

▪ 호텔·콘도업 E-9 고용허가제의 본사업 전환 검토('24년 시범, 건물청소원·주방보조원 직종)

(3) 건설·지역경기 회복 조기화

① 주택공급 확대, SOC 조기 발주·착공 등으로 건설경기 보강

① (공공주택) '25년 중 뉴:홈 10만호를 공급하고,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.8만호 착공

▪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및 노후 공공임대(158개 단지) 재정비·리모델링 로드맵 수립(상반기)

▪ LH·지역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를 가액·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

- 신축매입임대는 '24~'26년간 15만호를 공급하고, 3만호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약정체결

-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* 상반기 조기집행(4.5천억원, 100%) 및 규모 확대(+3천억원) 추진

*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임대주택을 건설·매입해 운영하는 리츠

② (수도권 주택) 수도권 중심으로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(상반기) 하고, '24년 既발표한 5만호*는 '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완료

* 서울 서리풀 2만호, 의왕 오전왕곡 1.4만호, 고양 대곡 0.94만호, 의정부 용현 0.7만호

- 3기 신도시는 '25년 중 1.2만호 착공하고 0.8만호 분양 추진

③ (SOC) 고속도로·고속철도·신공항·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·착공하여 상반기 내 70% 집행(^{'25예산}6.8조원, ^{1분기}52%)

② “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”를 통해 1순위 건설애로 해소

① (공공사업 공사비)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·총사업비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

* ①시공 여건(입지, 현장특성 등)에 따라 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·신설

②턴키 수의계약 체결시 실시설계 기간(약 1년)의 물가 변동분 반영 추진 등

-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*가 공공공사 비용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중소기업과 상생 가능한 보완방안 마련(’25)

* 공공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하여 시공사에 자재를 지급하는 제도

② (임대주택 매입가)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 10% 인상*

* 매입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→110%로 상향

③ (분양가)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·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

③ 규제·부담금·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·거래 저해요인 해소

① (규제·부담금) 착공·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 완화

- '24~'25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감면(수도권 50%·非수도권 100%)
-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(1년) 완화
 - *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
- 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(시행사·건설사 등)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(연체이자율) 인하 추진
-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제도* 적용요건 완화 검토**
 - * 인접부지의 미사용 용적률을 거래해 해당부지 건축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
 - ** ①동시건축 의무, ②거래대지 간 거리제한, ③결합건축 가능지역 등 제도 전반 검토
-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「재건축·재개발 촉진법」 입법 지속

② (세부담) 세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

-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(~'26.5)
-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(10년 임대)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(공시가격 기준) 상향*
 - * [건설형] (現) 9억원 이하 → (改) 12억원 이하
 - [매입형] (現) 6억원(비수도권 3억원) 이하 → (改) 9억원(비수도권 6억원) 이하
- 지분적립형 분양주택*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하고,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공급 신설
 - *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~25%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~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

③ (현안애로) 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소 등 사업 정상화 추진

- 상가 공실 등을 다양한 용도(주거, 업무, 문화시설 등)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전환 지원방안 검토*
 - * 연구용역을 통해 기축신축 건축물이 복합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검토

④ (보증확대)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, 정비사업,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

④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

① (부동산)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

-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 확대(공시가격 3억원 이하 → 4억원 이하)
-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완화(공시가격 1억원 이하 → 2억원 이하)

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본격 추진 】

- ①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('25.1.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)
* 전용면적 85㎡ 이하,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'24.1.10~'25.12.31일까지 취득 시
- ②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% 감면
* '24.1.10~'25.12.31일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'25.12.31일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

② (재정사업) 일자리 창출, 소비활력 제고 등 재정지원 프로그램 설계* 시 지방에 인센티브 지원 검토

* 예) 숙박쿠폰은 비수도권에 한해 지원

③ (가업상속) 기회발전특구에 이전·창업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추진

④ (전기요금) 수급 여건을 반영해 지역별 SMP(전력 도매가격) 도입, 송·배전비용 등 원가분석 거쳐 소매요금도 지역별 적용 추진

*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('24.6월 시행) 입법취지에 맞춰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자원의 지방 이전을 유도, 국가 전력공급 효율화 및 균형발전 촉진

⑤ (산단지원) 산단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이 폭넓게 들어설 수 있도록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*

* [現] 해당 입주기업 직원만 사용 가능한 부대시설(구내식당 등) 설치만 허용
[改] 타 기업 직원도 사용 가능한 부대시설(문화·체육시설, 카페 등) 설치 허용

2 시민 생계비 부담 경감

◇ 시민 삶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 및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

1 확고한 생활물가 안정 위해 11.6조 재정지원 등 정책노력 강화

- ① (재정지원) 농축수산물 할인지원, 에너지·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관리·대응을 위해 '25년 총 11.6조원 지원('24년 10.8조원)
 -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상반기 역대 최대 80% 이상 신속 집행
- ② (할당관세) 오렌지, 바나나,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 지원

품목명	관세율(%)	적용물량(톤)	기간	품목명	관세율(%)	적용물량(톤)	기간
바나나	30→0	200,000	상반기	두리안	45→15	1,700	상반기
파인애플	30→0	46,000		만다린	50→20	2,800	
망고	30→0	25,000		망고스틴	30→0	1,400	
자몽	30→0	6,000		오렌지 감귤류	45→15	2,000	
아보카도	30→0	2,000		오렌지	50→20	10,000	

- ③ (비축관리) 기상 여건 등에 맞춰 비축량을 최적 관리*하고, 비축된 농산물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신선비축체계** 구축('25~)

* AI를 활용해 기상상황, 작황·출하 정보 등을 분석 후 최적 비축량 도출·관리

** 보관 전 살균방역, 노후 비축기지 현대화, CA저장고 신규 도입 등 검토

- ④ (공공요금 등)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,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·이연 등 국민 부담 완화

- 지자체별 공공요금 현황과 내역을 분석 후 공표해 지자체가 요금 산정·조정 근거로 활용토록 지원하고, 착한가격업소 확대*

* 착한가격업소(개): ('22) 6,146 → ('24) 10,000 → ('25) 12,000 목표

- ⑤ (업종 전환)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복 등 기존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*하고 계약재배 시범사업 실시

* '25/'26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개정('25.7월부터 적용)

② 醫·食·住 등 주요 분야 시민 생계비 경감 노력 강화

【 (의료) 간병비용 완화, 취약시간대 의료접근성 등 제고 】

① (간병부담 완화) 인력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 (상반기 연구용역 추진)^{역동}

- (간병인력) 유휴 요양보호사 등 기존인력 활용을 확대하고, 간병 분야 취업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 확대 검토
- (품질관리) 간병서비스 표준지침을 마련·시행 (하반기)*하는 등 간병인력 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추진^{역동}

* 「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체계 구축방안」 연구용역(1분기~) 토대로 마련

② (야간 접근성 제고) 공공심야약국 지원대상 3배 이상 확대(64→220개소)

③ (건보료 등 동결) 건강보험료율, 장기요양보험료율* 모두 동결

* [건강보험료율]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동결 [장기요양보험료율] '17년도 이후 8년 만에 동결

【 (먹거리) “구조적 먹거리 부담완화 4종 패키지” 추진 】^{역동}

해외생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<u>민간 해외농업개발 금융지원 강화</u> * 배추도 사업비의 70%까지 융자(농어촌공사), 우대금리 제공(수은) 등 ▪ 「<u>곡물 공급망 확보 금융지원 종합방안</u>」 마련(상반기)
수급예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<u>농업관측정보에 수요 변화를 반영한 수급예측 모델 개발</u> * 소비정보 데이터 확보 및 분석·검증 시스템 구축('25) 수요-공급 반영된 장기 전망모형 구축 및 검증(~'26)
유통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<u>온라인도매시장 지원체계 고도화('25)</u> → 연간 1조원 거래 목표 * 대형구매업체 참여 확대(거래비중 7.5→20%), 판매자·구매자간 매칭정보 분석·제공 등 ▪ <u>산지-수요업체간 선도거래 활성화 위해 계약재배 쏠단계 온라인화 추진</u> * (매장: 계약재배 플랫폼) 생산자와 수요업체(유통·식품·외식) 정보 게시, 계약체결 지원 (계약이행: 온라인도매시장) 구매 확정 및 정산
인재유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<u>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</u> * (인센티브) E-9 농축산어업 분야 지원시 <u>계절근로 경력 가점 부여 검토</u> (전문기관) <u>계절근로 지원전문기관 지정근거 및 운영규정 마련</u> ▪ <u>전체 온실의 30%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 추진</u>(~'27) * <u>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확대</u>(2→4개소), <u>스마트농업펀드 추가조성</u>(5→6개) 스마트농업 관리자 자격시험 '25년부터 첫 시행

【 (주거) 주말부부, 中企 근로자 등 유형별 맞춤형 주거부담 완화 】

① (주말부부)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(가구당 한도 1,000만원)

* 현재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 불가

※ 구체적인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

② (中企 근로자)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

* 공공주택사업자-기관(中企·대학교·공공기관 등) 간 협약을 통해 기관공급 확대

· 중소기업 장기근속자*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시 뿌리산업 재직자에 대한 가점(現 5점) 확대 검토

* 중소기업 재직기간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재직자

③ (저소득층)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선비 대폭 인상*(+29%)

* 수선비 단가(만원): (경보수)457→590, (중보수)849→1,095, (대보수)1,241→1,601

④ (전세 임차인)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적용범위 확대*

* [現]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 적용

[改] 대한 시 금융기관→금융기관 간 상환이 이루어져도 임차인 소득공제 적용

【 (교육) 늘봄학교 확대 등 돌봄·교육비 경감 추진 】

① (늘봄학교 확대)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 1~2학년까지 확대*해 교육·돌봄부담 완화 추진(전체 초등학교 6,185개교, 특수학교 178개교)

* ('24.2학기) 전국 초등학교 도입(초1) → ('25) 초1~2 → ('26) 모든 학년 이용 지원

② (우수 사교육 경감모델 확산)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모델 발굴·확산을 위한 '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·학교*' 확대**

* 교육청·지자체 등 협력, 지역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 운영시 최대 5억원 지원
↳ 예: (춘천) 수포자 없는 중점학교(예: 1:1 멘토링, 레벨업캠프), (부산) 부산형 인터넷 강의 제작·보급 등

** [現]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→ [改] 교육발전특구 이외 지역까지 우수모델 확산 노력

③ (기출문제 공개) 내신 기출문제의 공개범위 확대, 홈페이지 공개 등 공개방식 명확화

* 기출문제→정답까지 공개범위 확대, 학교 홈페이지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권장

【 (통신)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, 알뜰폰 활성화 지속 추진 】

- ① (단말기)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*를 차질없이 추진하고, 중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** 시행(상반기)

*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,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병행

**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

- ② (알뜰폰)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「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」 마련(1월)

【 (교통·에너지) K-패스 및 에너지바우처 제도개선 추진 】

- ① (교통) K-패스 신규가입자* 및 다자녀 할인율을 확대**하고, 전국으로 단계적 확산(189→210개 시군구)

* ('24.9) 231만명 → ('25말) 360만명 / ** ('24) 20% → ('25) 30~50%

- ② (에너지) 가구 특성 및 수급자 의사를 고려한 냉난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상시화(동·하절기 통합 운영)

* [現] 하절기(7~9월, 가구당 평균 5.3만원), 동절기(10~5월, 가구당 평균 31.4만원)

[改] 동·하절기 통합 운영(7~5월, 가구당 평균 36.7만원)

【 (금융) 안정적인 서민정책금융 공급 】

- ① (공급확대) 11조원 규모 역대 최대 서민정책금융 공급('24^{계획} 10.4조원)

- ② (조치연장) 서민정책금융 대출한도 확대조치¹⁾ 및 신용회복위 신속²⁾·사전³⁾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(~'25)

1) 근로자햇살론(1,500→2,000만원), 햇살론15(1,400→2,000만원), 햇살론뱅크(2,000→2,500만원)

2) [기존] 연체위기자(실업, 질병 등) 및 30일 이하 연체자, 최대 3년 상환유예 지원

[특례] 지원대상 확대(신용평점 하위 20%인 저소득층 또는 청년 추가), 이자감면 추가

3) [기존] 31~89일 연체자 이자감면, 상환유예 → [특례] 취약계층 원금감면 추가

- ③ (저리용자) 미취업대학생 등 저소득·저신용 청년 대상 저리용자 확대

* 집행 추이에 따라 햇살론유스 용자규모 1천억원 확대(2→3천억원)

- ④ (추가대책) 「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」 마련(1분기)

◇ 청년·중고령층·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및 사회이동성 개선

(1) 청년의 일자리-교육-자산-주거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

① [일자리]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본격 가동 → “쉬었음” 밀착지원

① (쉬었음 밀착관리)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‘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’을 확대해 ‘쉬었음 청년’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지원 ^{역동} 참고 2~3

- 졸업예정·유예자, 직업계고·대학원 졸업생, 미취업청년DB 대상자 (1만명), 고립은둔청년 등 애로계층 전반으로 단계적 대상 확대*

* 대학 졸업 2년내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시범실시⁽²⁴⁾ → 국가장학금 신청시(매년 약 150만명) 뿐 아니라 고용센터·고용24 통해 정보제공 동의 후 서비스 제공^(25~)

- 진로상담·역량진단 후 활용하는 ‘취업지원 프로그램 메뉴판’을 신설, 직업훈련 → 매칭까지 스스로 기획하는 프로그램 (5만명, 121개교) 제공

② (사각지대 해소) 올케어플랫폼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 지원 강화

- (가족돌봄·고립은둔) ‘발굴*’, 심리상담, 사회·노동시장 복귀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화 프로그램 연계 제공

* 가족돌봄청년, 고립·은둔청년 통계 신규 개발·작성(인구주택총조사·사회조사 등 활용)

- (자립준비청년) 18세 이후 위탁가정·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인 보호연장아동 등 청년 자립지원* 규모 확대(1,000 → 1,500명)

* 1인당 20만원 한도, 심리검사·치료 연계, 건강관리, 예방접종 등 지원

③ (일자리 지원) 조기입직 “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” 시행 ^{역동}

① (일경험) 실제 직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민간·공공 부문 일경험 기회를 ‘25년 +1만명 수준 확대

* [민간] 인턴형 1.9 → 2.36만명, 프로젝트형 0.6 → 1.0만명, ESG형 0.8 → 0.95만명 등
[공공] 공공기관 2.0만명 수준, 중앙부처 0.5만명(프로젝트형 인턴유형 신설) 등

- 일경험 참여유인 강화* 및 온라인 등 프로그램 내실화 병행

* [기업] 우수기업 리스트 공개,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가점, 장기 인턴십 운영시 추가지원 등
[참여청년] 우수참여자 대상 기관장 표창, 기업추천서 제공 등

② (입직연령 단축) 공공·민간 부문 고졸 채용 인센티브 확대*

* [공공]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고졸채용 만점비율 상향(現 8% → '25년 9% → '26년 10%)
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신설 등 고졸채용 확대
[민간] 고졸채용시 우수기업 평가 등 인센티브 부여, 교육청·노동청 협업사례 모델화·확산

③ (빈일자리)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청년취업 유도

- ▶ [취업]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, 훈련수당 등 지원
- ▶ [근속]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2년 근속시 빈일자리 특화 도약장려금 신설
(18개월 이상 재직 시 18·24개월차에 각 240만원 지원, '25년 4.5만명)
- ▶ [기술연수]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시 2~6개월 기술연수 지원

④ (적응지원)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
산업단지 중심으로 직장적응 프로그램 제공

* [대상] 산업단지 입주기업 채용 1년 이내 청년 3,300명 대상(10개 광역지자체)
[예시] 다수기업 신입직원 참여 합동교육, 조직내 성장, 협업 노하우, 비즈니스 매너 등 교육

② **[교육] ① 사회통합전형 강화 + ② 직업계고 졸업생 성장 등 지원**

【 1. 사회통합전형 제도개선 】 역동

① (고등학교) 학교운영평가 내 충원·유지노력*, 학생지원 강화** 등
지표를 추가하고 배점을 늘려 자사고 등 사회통합전형 강화

* 설명회·홍보 실적, 지원자 대비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충원노력 평가

**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의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, 교과/비교과 프로그램, 상담 등

-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입학 지원할 경우
우선배정, 가점부여 등 우대방안 신설 검토(교육청 협의)

② (대학교) 지역 소재 학생의 대학 진학기회 확대 등을 위한
지역균형 입학전형 및 관련 지원제도의 내실화 추진

【 2.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및 지속성장 지원 】^{역동}

- ① (취업역량 강화)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, 취업·진로상담 등을 지원하는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(17 → 24개) 추진
 - 학력·경력 등과 무관히 교육과정 이수·평가만으로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확대*

* [現] 검정형 자격 545개 종목 중 186개 종목을 과정평가형과 병행 운영
[改] 학생 선호도가 높은 전기공사 산업기사 등을 과정평가형으로 추가
- ② (지속성장 지원) 군복무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직업계고 졸업 재직자가 전역 후 해당기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 강화*
 - 지자체, 교육청, 기업 협약을 통해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'전역 후 중소기업 복귀인력 관리 사업' 확산을 위해 직업계고 혁신지구 평가 시 해당 교육청에 가점 부여
 - 고졸 취업자의 재직 중 후진학 지원을 위해 재직자 대상 대학 등록금 지원(중소·중견기업 100%, 대기업·비영리기관 50%) 확대

【 3. 대학 혁신 】^{역동}

-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(RISE)와 글로벌대학 육성을 지속 추진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및 대학개혁 성과 가시화

③ (자산) 청년 자산형성 촉진 패키지 지원^{역동}

- ① (초기자산 형성)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매칭한도를 상향*하고, 디딤씨앗통장** 가입대상을 확대(기초수급자→차상위)해 자산형성 지원
 - * [現]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~70만원 → [改] 월 70만원
 - ** 아동1: 정부2로 매칭(최대 10만원) → 만 18세 이후 자립용도 활용
- ② (주거지원 연계)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계좌* 만기금을 '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'으로 일시납입시 한도(1,500만원) 예외 적용
 - * 디딤씨앗통장, 청년내일저축계좌(34세 이하 중위소득 100% 이하 근로자 저축시 국가가 10~30만원 지원)
 -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시 금리우대(10bp)
- ③ (수익률 확대)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형 외 별도로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(하반기)
 - *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운영되고 있으나, '25년말 일몰 예정이고 투자상품 범위가 제한적

④ (신용축적) 청년내일저축계좌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가 점 부여를 추진해 저축유인을 제고하고 신용형성 지원

- * [現] 예적금 등 일정기간·일정금액 이상 납입 시 신용평가사에서 신용점수에 반영(본인 요청)
- [改] 청년내일저축계좌 성실납입시 가점 부여 추진(자동 반영)

⑤ (자산관리)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개인별 신용·재무 여건 분석, 자산관리목표 설정, 금융상품 추천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*

- *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(3년) 수령 예정자 대상

⑥ (ISA 선택권 확대)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 폐지, 다계좌 허용* 참고 4

- * 현행 ISA는 중개형·신탁형·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 가능

④ (주거) 청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강화

① (원거리 통학 대학생)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(4.2만명)을 대상으로 '주거안정장학금' 신설(1분기~)

- * [대상] 기초·차상위 대학생 [지원금액] 월 20만원(학기 중 지원, 계절학기 포함)

② (부모와 따로 사는 취약청년) 주거급여 분리지급 절차 간소화

- *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 가구 청년에게 주거급여 별도 지급 중
→ 분리 지급 대상 확인 시 방문 조사 외 거주확인서 등 서류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허용

③ (창업 희망)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지속 추진*하고, 매입한 반지하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**

- * '24년(1~11월) 중 1,123호 매입하였으며, 조기 매입공고, 매입절차 단축 등 통해 활성화 추진
- ** 공공(LH, SH)이 리모델링 후 지자체에 무상임대, 자치구에서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

④ (도심거주 희망)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(10개소)을 통해 청년임대 2천호 이상 공급 참고 5

- 대학생들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 활성화 추진

(2) **중고령층의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**

① **국민·퇴직연금 등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**

① (국민연금) 지속가능성 확보, 세대간 형평성 제고,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방향성* 하에 국회 연금개혁 논의 지원

* 21년 만에 정부의 단일 연금개혁안 제시('24.9월)

② (퇴직연금) 단계적 의무화, 수익률 제고 등 추진^{역동}

▶ [단계적 의무화] 쉰 사업장 대상, 규모(대→소)순으로 단계적 의무화

▶ [수익률 제고] 사적연금시장 경쟁 환경 조성,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* 마련 추진

* 예) 실물 이전, 로보어드바이저(RA)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, 디폴트옵션 제도개선 가입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공적·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금형 제도 도입 검토 등

▶ [연금화 촉진]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 강화 등 중도 누수 방지 방안 검토 및 국민연금 개혁방안 추진일정과 연계해 세제혜택 확대* 추진

* 퇴직소득 연금수령시 세금 감면 구간 추가([※]10년↓ 30%, 10년↑ 40% → [※]20년↑ 50% 감면 신설) 등 검토

③ (개인연금)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시 연금소득세율 인하*(4→3%)

* 국민연금 개혁방안 추진일정과 연계해 법령개정 추진

④ (주택연금)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보*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 검토

* (현행)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액의 50%를 소득으로 반영

② **전직 및 고용유지 지원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**

【 1. 45+ 생애전환 경력설계 프로젝트 추진 】

① (민간) 우수 고용서비스기관을 45+생애설계지원센터*로 지정하고, 사업주가 재직자에 경력설계서비스 제공시 인센티브 부여

* '25년 공모를 통해 8개소 선정해 시범운영,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45+ 생애설계지원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확대 검토

▶ 사업주 훈련으로 경력설계서비스 제공시 기업에 훈련비용 지원*(40~90%)

* (1,000인 이상 기업) 40%, (1,000인 미만 기업) 60%, (우선지원대상기업) 90%

▶ 1,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고령자고용법 상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 간주

② (공공) 고용센터·중장년내일센터 등 활용, 실업급여 수급자 등 대상 경력설계·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(6.1 → 6.5만명)

- 중장년 고용플래너 통한 기업 컨설팅(중장년내일센터 12개소, 200개사) 통해 적합직무 발굴 및 기업수요 기반 채용 순과정 밀착 관리*

* ①기업의 중고령층 고용문제 상담·분석, 중고령층 적합직무 발굴 → ②직무별 훈련과정 설계 및 훈련기관 연계 → ③적격구직자 알선 ※ 성과분석 바탕 서비스확대·내실화방안 마련(연구용역)

【 2.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및 중장년 채용 인센티브 확충 】

① (계속고용) 경사노위 논의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추진^{역동}

- 노사 자율로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만 재고용해도 계속고용장려금 지원*

* [現]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 일률적 재고용이 원칙
[改]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재고용해도 지원

② (경력지원) 퇴직 중장년층에게 직무교육과 함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인턴제 사업* 신설(910명)

* [참여자] 월 최대 150만원 / [참여기업]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

③ 치매 등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

- 치매악화 등에 따른 자기결정 곤란에 대비한 공공신탁 도입 검토 및 민간신탁 활성화 추진

▶ [공공] 치매 고령층의 자기결정 곤란 상황에 대비한 자산관리를 위해 공공신탁 사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도입 검토('25)

* 「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 구축방안」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(~'24.12)

▶ [민간] ①치매고령층이 민간신탁 활용시, 다양한 자산을 신탁 가능하도록 제도개선* 추진
②신탁·노후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금융기관의 신탁업무 위탁 허용

* 일반사망보험금 청구권 허용('24.11), 담보대출 잔존 주택 등 허용(법개정 추진)

(3) 비용 경감, 매출 확대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지속 보장

① 채무·인력·수수료 등 소상공인 핵심 비용 경감

① (채무) 새출발기금 대상*을 추가 확대(~'24.11월 사업영위자)하고, 취업·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 추가 상환유예(예: 1년) 부여** 검토

* [現] '20.4월~'24.6월 중 사업영위한 차주 → [改] '20.4월~'24.11월 중 사업영위한 차주

** [現] 새출발기금 대상자에 1~3년 상환유예 지원

[改] 취업·재창업 교육 이수한 취약차주(중증장애인, 기초수급자, 고령층) 희망시 추가 상환유예

▪ 채무조정·상생보증 등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추진^{역동}

▶ [맞춤형 채무조정]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상차주에 장기분할상환(최대10년) 지원

▶ [상생보증·대출] 성실상환자,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대상 “소상공인 상생·보증 대출” 출시

▶ [폐업자 지원] “폐업자 저금리·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” 도입(최대 30년)

▪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(정책자금 상환연장, 전환보증, 저리 대환대출)에 대해 자금공급·대상·인센티브 등 추가 보장

▶ [자금공급 확대] 전환보증5조원 확대('24~'27, 기존5→변경10조원)

▶ [대상 확대] 상환연장·경영애로 인정요건 완화 및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 포함 대환대출·거치형 대환대출 신설 및 햇살론도 대환 대상 포함 검토

▶ [인센티브] 상환연장+대환대출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7천만원 추가 대출
전환보증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3천만원 추가 보증

② (자금)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 내 최대한 공급하고, 필요시 추가 확대

▪ 중소·소상공인 유동성 애로해소를 위해 매출채권 팩토링을 상반기 내 최대한 공급하고, 필요시 추가 확대

③ (인력)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·직무 선별, E-9 적용대상 확대

* 예) 음식점, 호텔·콘도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후 요건개선 검토

④ (수수료·세부담) 영세·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*하고,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및 정산주기 단축 등 상생방안** 시행

* (신용카드) 연매출 10억원 이하 △0.10%p, 연매출 10~30억원 이하 △0.05%p

(체크카드) 모든 영세·중소카드가맹점 △0.10%p

** (수수료 인하) 現 5~14% → 改 5~8%, (정산주기 단축) 現 약 60일 → 改 약 30일

▪ 「소상공인법」에 따른 백년가게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

-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* 및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영위기로 인한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**

* 사업소득별 한도(만원 '24대비) : (~4천만) 500→600 (4~6천만) 300→400→500 (6천만~1억) 300→400

** [現] 기타소득으로 과세(세율 15%,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)

[改] 퇴직소득으로 과세('23년 실효세율 3%)

- ⑤ (폐업지원) 소상공인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시, 점포철거비 지원인원 확대 추진(집행상황 고려)*

* [지원인원] 3만명 / [지원금액] 3.3㎡당 20만원, 최대 400만원

② 세제 지원,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

- ① (소상공인 소득공제) 영세소상공인* 점포에서 사용하는 '25년 신용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2배 인상(15→30%, '25년 한시)

* '23년 매출액 기준 1억 400만원 이하(간이과세 기준금액) 사업자(부동산매매업, 전문직종 등 제외)

- ② (온누리상품권 패키지)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.5조원 발행하고, 할인을 및 사용처 대폭 확대

- (할인율 상향) 설 성수기 한시적(1.10~2.10)으로 디지털(카드형·모바일)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% → 15%로 상향

- 온라인 전통시장관* 이용시, 상품가격의 5% 할인쿠폰 지급

*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

- (환급행사 신설) 설 기간(1.10~2.10) 디지털 결제액의 15%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(인당 최대 2만원 한도)

※ [기대효과] 온누리상품권(카드형·모바일)으로 13만원 상당 물품 구매 시, 4만원(30%) 할인 혜택(상품권 구매시 할인 2만원 + 디지털 환급 2만원)

- (사용처 확대) 골목형상점가를 추가지정*(+약90개)하고, 골목형 상점가 밀집요건을 완화** (2,000㎡당 30 → 15개, 상반기)

* 골목형상점가(개): ('23말) 182 → ('24.8) 257 → ('24말) 353 → ('25.上) 450

** 골목형상점가 밀집요건을 완화한 표준조례안 배포

-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밀집요건을 대폭 완화(2,000㎡당 10개)

- ③ (디지털화)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비즈니스 혁신 역량 강화

- 온라인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성장을 촉진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(K-커머스론) 신설^{역동}

* [금리] 정책자금 기준금리+0.2%p / [한도] 운전 1억원, 시설 5억원

(4) 노동약자 보호망 지속 확충,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 강화

① 노동약자 보호 등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노력 강화

① (노동약자 보호기반) 현행 노동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*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^{가칭}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^{역동}

* 예) 프리랜서, 특고·플랫폼종사자, 영세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

② (고용안전망 강화) 고용보험 기준을 '근로시간'(월 60시간)에서 '소득'으로 변경하고, 국세 소득자료를 연계해 미가입자 발굴

③ (생활안정 강화) 취약근로자·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강화

▶ [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] 한도 한시상향(2→3천만원), 금리 한시인하(1.25→1%), 대상 확대(의료·혼례·장례비 등 한정 → 자녀양육비 신설)

▶ [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] 신용보증 대위변제 선제적 확대(+300억원)

▶ [구직급여] 필요시 기금변경을 통해 고용 안전망 확충

④ (체불근로자 보호)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대(+700억원)하고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(14→7일)

② 근로자 역량개발과 노동시장 참여 유도를 통해 근로 안정 지원

① (휴식권 강화) 평생교육법 상 평생학습휴가 도입 기업에 우수 기업 평가제도 심사시 인센티브 검토^{역동}

▪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위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, 대체공휴일 확대* 등 휴일제 개선방안 마련 추진^{**역동}

* 전체 공휴일(15일) 중에 1.1일,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미적용

** 연구용역(1분기) → 사회적 논의(2~4분기)

② (사내대학) 사내대학원 설치·운영 근거*를 마련하고, 중소기업 재직자의 타업종 사내대학·대학원 입학를 허용^{**}

* 「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」 제정(산업부) 및 사내대학원 설립인가 매뉴얼 마련

** [現] 자사 직원+협력업체 등 동종업종 종사자 → [改] 중소기업 재직자는 업종 무관하게 입학 허용

③ (직업훈련) 영세 훈련기관의 전문화·규모화 등을 통한 훈련 품질 및 성과 제고방안 강구(상반기 연구용역)^{역동}

- 디지털·첨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*하고, 지역기업의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*

* K-하이테크 트레이닝 확대(4.4→4.5만명),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확대(91→111개 과정) 등

** [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] 필요시 선제적 기금변경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

④ (노동참여 인센티브)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 시, 노동시장 참여 등에 따라 근로·사업소득 공제율 차등 적용 추진^{역동}

* [現] 근로기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근로·사업소득 공제율 30% 일괄 적용

[改]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 공제율 상향 등 논의('25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)

(5) 저소득, 노인, 장애인 등 약자 맞춤형 지원 확대

복지 분야 예산을 4.7% 증액해 저소득층 등을 두텁게 보호

* 총지출 증가율 2.5%의 1.8배

① (저소득층)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(4인 가구 +11.8만원, 6.42%)하고, 수급대상 확대를 위해 재산·부양의무자 기준 등 완화

	현행	개선
자동차 소득환산율 4.17% 적용 기준	1,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	2,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
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	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	부양의무자 연소득 1.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

② (노인)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일 자리를 확대(103→110만개)하고,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(月33.5→34.3만원)

-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90% 이상을 1분기 중 신속 채용 추진
- 디지털배움터·스마트경로당 등 디지털 포용 기반 강화

③ (장애인)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확대(12.4→13.3만명)하고,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* 실시

*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 및 시범운영('25.7~'25.12)

2

대외신인도 관리

1

금융·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

◇ 금융·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

① 외환 유입이 촉진되도록 기존 제한 조치를 전반적으로 완화

- ① (건전성 규제 완화) 원활한 외환 유입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완화적으로 개선
 - (선물환포지션) 국내은행(現 50%)은 자기자본의 75%까지, 외은 지점(現 250%)은 375%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한도 상향
 - (외화유동성 S/I) 제도 정합성을 제고하고 강화된 규제를 유예*

* 강화된 스트레스테스트 미통과시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 유예 연장('24→'25.6)
- ② (대출규제 완화)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 제한 완화
 -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중소·중견·대기업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 허용

②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수요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- ① (이종통화 결제확대) 현지통화 직거래 제도(LCT) 활성화를 통해 무역거래시 달러 환전 없이 거래상대국 통화결제 확대
 - 9월에 출범한 한-인니간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*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 검토

* 한→인니 지급 무증빙한도 상향: [現] 건당 5천불/연간 10만불 → [改] 건당 10만불
LCT 수행은행의 계좌 일말잔액 한도 상향: [現] 3.5백억원 → [改] 7백억원
- ② (국민연금 외환스왑) 現 500억불 한도를 650억불(+150억불)까지 확대하고, 만기는 現 '24년말에서 '25년말까지 연장

③ 자금 수급 개선, 건전성 제고 등 금융시장 안정 추진

- ① (유동성 공급)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 RP매입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은 외화RP매입, 외화대출 등 추진
 - 채권시장안정펀드(20조원), P-CBO(2.8조원) 등 최대 37.6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'25년 지속 운영
- ② (건전성 제고) 한시 금융규제 완화조치는 은행권 LCR* 규제 비율 환원(97.5%→100%, '25~) 등 개별여건에 맞게 단계적 정상화

*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高유동성자산 비율

※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정상화 계획(1월~, 추후 추가 검토)

- ▶ [은행] 유동성커버리지(LCR) 규제비율 97.5%→100%로 정상화(기존 100%)
- ▶ [저축은행] 예대율 규제비율 110%→105%로 부분 정상화(기존 100%)
- ▶ [여전] 원화유동성 규제비율 90%→95%로 부분 정상화(기존 100%)
- ▶ [금융투자]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12%→8% 축소 유예 해제

- 스트레스 완충자본*은 시범운영('23) 결과를 토대로 도입 시기·방법을 재검토해 '25년 하반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

*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차등(자본적립비율 최대 +2.5%p)

④ 우리 경제 대외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 소통 강화

- ① (국제사회 소통)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노력과 정책기조를 충분히 전달
 - * 주요국 정부, 신평사, 해외투자자 간담회 등 통해 안정적 협력과 투자 당부
 - 고위급 인사를 국제금융협력대사,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해 금융·통상·인바운드 직접투자 밀착관리
 - 주요 경제·통상 인사, 싱크탱크 면담 등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범정부 옴부즈만TF 가동
 - * 미국 신정부 면담을 통해 양국 경제·금융 협력관계 공고화
- ② (한국경제설명회) 연초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 요청

5 경제·금융상황 24시간 모니터링, 필요시 신속히 안정조치

- 1 (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) 금융·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조치
- 2 (관계부처 합동 경제·금융상황 점검TF) 경제 쏠분야 모니터링을 강화
 -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장참가자, 국내 경제단체, 주요국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 도모

2 자본시장 선진화

◇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,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시장 인프라를 정비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추진

1 밸류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, 주주가치 제고기반 조성

- 1 (인센티브) 주주환원촉진세제, ISA 세제지원 강화 등 “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” 추진^{역동}
 - ① 주주환원 증가금액(직전 3년 대비 5% 초과분) 법인세 5% 세액공제
 - ▶ [대상] 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
 - ▶ [요건] 밸류업 공시 + 직전 3년 평균대비 주주환원(배당+자사주소각) 5% 이상 증가
 - ▶ [지원규모] 5% 초과 증가분의 5% 세액공제 ▶ [한도]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%
 - ② 배당 증가금액(직전 3년 대비 증가분 등) 저율 분리과세
 - ▶ [대상]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
 - ▶ [요건]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(배당·자사주소각) 증가
 - ▶ [지원규모] 분리과세(14→9%, 최대 45→25%)

- ③ ISA 납입한도·비과세한도 확대,
- ④ 국내 투자형 ISA(국내 상장주식,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 가능) 신설

▶ [일반 ISA] ①납입한도: 연 2천만원(총 1억원) → 연 4천만원(총 2억원)
 ②비과세한도: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 → 500만원(1,000만원)

▶ [국내투자형 ISA] ①납입한도: 연 4천만원(총 2억원)
 ②비과세한도: 1,000만원(서민형 2,000만원)
 ③가입대상: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까지 포함
 (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% 분리과세)

② (주주가치 제고기반) 투자자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 지속 추진^{역동}

- 저성과기업 효율적 퇴출 유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*
- * 상장폐지 심사 시 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기간
 (코스피 최대 4년, 코스닥 최대 2년) 및 심의단계(코스피 2심제, 코스닥 3심제) 축소
-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·운용사(現 238개)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방안 연내 마련

- 합병·분할시 이사회 의 주주 이익 보호규정 신설 등 일반주주를 실효적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* 추진

- * ①합병 등 결정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,
 ②상장기업간 합병비율 규제개선 및 외부평가·공시 의무화,
 ③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공모 신주의 20%를 기존 주주에 우선배정 허용

-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* 마무리('25.3)

- *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, 대차대주 상환기간·담보비율 차이 해소, 공매도잔고 공시 확대 등

③ (연기금 투자)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 대상·체계·전략 등 전반적 연기금투자폴* 제도 개편방안 마련('25.2)

- * 연기금·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운용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 운용
- ** 위탁규모: ('02) 1.9 → ('24.上) 59.2조원 / 위탁기관: ('02) 43 → ('24.上) 102개

- ①공공부문 위탁 확대, ②심사절차 단축 등 대체투자 여건 개선,
③외화 MMF 등 기금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도입

② 국채투자 인프라 전면 개편해 차질없이 WGBI 편입 추진

① (글로벌 접근성) “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” 추진^{역동}

인프라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글로벌 수탁은행(또는 자산운용사)이 외국인투자자를 대신해 증권·외환 거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매매 방식 도입 * 하위펀드별로 수행해야 하는 계좌개설, 매매 등 거래 절차를 글로벌 수탁은행, 자산운용사 등의 대표 명의로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
글로벌 판매 모델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외금융기관이 국내금융기관과 연계해 외국인투자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‘글로벌 판매 모델’ 마련 * 글로벌 시장은 은행이 외국인투자자와 점점 큰 해외지점을 중개인으로 국채 거래하는 모델이 일반적, 우리나라는 은행의 해외 마케팅 활동에 제한
국채 활용성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외국인투자자의 보유국채를 환매조건부 매매* 등 담보거래**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정비 * 담보로 맡긴 채권을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되시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·매수하는 거래 ** 외국인투자자-국내 금융기관 간 담보 거래가 가능하도록 예탁원 내 시스템 마련
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적격외국금융회사(QFI) 등록 의무 완화*, 비과세 신청절차도 간소화** * [現] 수탁은행 등 투자자의 자산을 보관하는 기관들도 등록 → [改] 등록 면제 ** [現] 비과세 신청서 제출 → [改] 제출 의무 폐지
야간거래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야간 국채선물시장 개장(‘25.6) → 글로벌 투자자 국채 파생상품 접근성 제고 * [現] 9:00~15:45 개장 → [改] 18:00~06:00+1 야간개장

② (인수·유통역량 강화) 국채 유동성을 제고*하고, 국채PD 기관 확대(은행 1~2개)와 전자거래 활성화 등 추진

* 경과물 대상 재발행 및 조성의무 부과 추진

③ (개인투자 활성화)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을 신규발행하고,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부여

- 자동청약 시스템을 도입*하며, 청약기간(3→5일)·시간(+30분) 확대

* 정기 예·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자동 투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

③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환시장 인프라·접근성 확충

① (실수요 거래 확보) 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, 전자거래 시스템* 활성화 등을 통해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^{역동}

※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: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등 외환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

* 여러 고객으로부터 주문받는 거래 규모(예: 해외여행 자금 환전 등)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시장에 적정한 주문을 내는 시스템

② (중개 인프라 선진화) 기업, 해외투자자 등 고객이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방식 다양화^{역동}

* 기업 등 고객이 대고객외국환중개회사(Aggregator)를 통해 다수 기관의 호가를 확인·거래하는 시스템 마련

③ (외환거래 Cut-off 완화) 결제시한 연장* 및 일시적 원화차입 확대** 등 통해 외환거래 활성화

* [現] 결제 전일 또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요청 → [改] 결제 당일 오전 11시까지 연장

** [現] 글로벌 수탁은행 및 투자자만 가능 → [改] 증권투자 절차 관련 모든 기관 허용

④ (RFI 외전망 보고 부담 완화) RFI의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위반 제도기간(~'24.12)을 '25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

④ 가상자산·핀테크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 대응, 규율기반 마련

① (가상자산) 우회·불법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국경간 거래 보고 의무 부과

② (외환 핀테크) 비대면 고객 검증 및 해당 거래 확인 강화*, 소비자 보호장치 신설** 등을 통해 안정적 장기발전 기반 마련

* 예) 고객확인 강화, 최종 고객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 등

** 예) 이행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확대, 선예치 고객자금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

3 외국인 투자(FDI) 촉진

◇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본·기술유입 촉진

① 재정·세제·금융 등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

① (재정) 지원한도·국비분담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상반기 중 '25년 현금지원 예산 2천억원 최대한 집행으로 적극 지원

-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+5~20%p 씩 항구적으로 상향하고, '25년에는 한시적으로 최대 75%까지 +10~25%p 추가 상향

[외투 현금보조금 분야별 최대한도]

현 행		개 정(괄호 안은 '25년 한시)	
R&D센터, 국가첨단전략기술	50%	R&D센터(국가첨단전략산업),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	50%(75%)
		R&D센터(기타), 국가첨단전략기술	50%(60%)
신성장·첨단·소부장	40%	신성장·첨단·소부장	45%(55%)
글로벌 기업 지역본부, 대규모고용, 지역특화산업 등	30%	대규모고용, 지역특화산업 등	40%(50%)

-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 국비분담비율을 10%p 상향

[외투 현금보조금 국가-지자체 분담율]

현 행		개 정	
수도권	30 : 70	수도권	30 : 70
비수도권	60 : 40	비수도권	70 : 30
기회발전특구	70 : 30	기회발전특구	80 : 20

* 첨단·연구개발(10%p), 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기술 분야(20%p) 국비분담율 상향 가능(단, 한도 80%)

- 외국인 투자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 재정지원 확대('25년 2천억원)

② (세제) 외국인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·개소세·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

* (現) 5년 100% 감면 + 1년 연장 가능 → (改) 5년 100% 감면 + 2년 연장 가능

③ (기회발전특구)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·재정지원,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^{역동}

-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, 해당 면적은 시·도별 면적상한*에 미적용하고 기존 투자분도 소급 적용**

* [광역시] 4.95km²(150만평) / [도] 6.6km²(200만평)

** 예) A지자체는 既지정된 외투기업 면적(10만평)만큼 추가로 기회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고, 향후 외투기업 유치시 기회특구로 지정될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면적상한 적용 예외

※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

- ▶ [세제지원] 창업기업(사업장 신설 포함) 소득·법인세 감면(5년 100% + 2년 50%)
공장 신증설시 취득세 75%, 재산세 5년 75% 감면 등
- ▶ [재정지원 등]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5%p 가산, 개발부담금 100% 감면
- ▶ [정주여건 개선] 기업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
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

④ (금융) 외투기업에 대한 우대지원(수은) 프로그램*을 신설하고, 외투촉진 펀드 신설을 검토해 신·증설 투자부담을 경감**

* 외투기업에 대해 유턴기업 수준 이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추진

** 예)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모펀드 조성, 민간 매칭 통해 자펀드 결성

② 정주여건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

① (규제)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2차 외투환경 개선방안* 마련

* 교육·의료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, 고용·출입국·외투업종 제한 등 규제 완화

- 외국인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-음부즈만(외투·중기·금융 등)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 구축

② (홍보) 고위급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「인베스트 코리아 서밋*」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개최 추진

* [구성] 컨퍼런스, 투자유치 상담회, 지자체 타운홀 미팅·현장 시찰, 외신간담회 등
[참석자] 외국인투자가, 주한 외국상회, 주한 대사관, 정부·지자체 등

- KOTRA, 지자체 합동으로 외투기업 소속 주재원·가족 대상 생활 정착지원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

4 잠재리스크 관리

◇ 부동산PF와 가계부채 등 안정적 관리와 한계기업 연착륙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건전성 관리노력 강화

1 60조원 PF 시장연착륙 프로그램 운영 + 가계부채 안정 관리

① (부동산PF) 질서 있는 연착륙 지원을 위해 약 60조원 수준 PF 시장안정 프로그램* 운영

* PF 사업자보증(35→40조원),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,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

- 쏠 PF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해 신속한 재구조화·정리를 유도

② (가계부채)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 추진

-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* (7월, 잠정) 등 DSR 규제 점진적 내실화 추진

* (1단계) 은행권 주담대 → (2단계) 은행권 주담대·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 → (3단계)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대·신용대출·기타대출

2 ① 사전대응-② 구조조정-③ 도산 3단계 기업 구조개선 프로젝트

① (사전대응) 일시적 경영위기 겪는 유망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'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' 지원규모 대폭 확대**

* [중진공] 경영개선계획 수립, 정책자금 지원 / [민간은행] 만기연장·금리인하 등 지원

** [지원대상] 325개 → 약380개 / [24예산] 1,165억원 → [25예산] 1,516억원

② (구조조정) 신속성·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선택권·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

* 기업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 개선방안 마련(~'25)

③ (도산) 취약기업의 신속한 회복 및 효율적 정리를 위해 도산 제도 개선방안* 등 추진

* [회생] 자율구조조정지원(ARS) 제도 내실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(서울회생법원) [파산]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(현재 서울·수원·부산 회생법원만 시행) 확대 검토

3

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

1

新대외경제전략 추진

◇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·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제고

① [미국 新정부 대응]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 구축

- ① (대내) '대외관계장관 간담회*'를 통해 美 신정부 출범('25.1.20)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
 - * 기획재정부, 외교부, 산업통상자원부, 국무조정실 장관급이 참석하는 정례회의
 - 산업·통상·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(액션플랜)을 마련하여 대응
 -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(예: 조선)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 마련
- ② (대외)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·미 협력관계 심화
 - 美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 구축, 美 의회·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 마련
 -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하여 실질협력 확대방안 모색

② [新대외질서 대응] 미·중 경쟁,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 대비

- ① (통상 네트워크 확대)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^{역동}
 - 아시아·아프리카·중동·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저변 확대*, 칠레·중국·영국 등 주요국과의 FTA 개선·후속 협상 가속화
 - *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, 탄자니아, 모로코 등과 신규 EPA(경제동반자협정) 협상 추진
 - 한-EU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통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
- ② (新통상규범 대응) EU CBAM 본격 시행 전 우리기업 부담 완화*를 위해 노력하고, 美 해외오염관세법안(FPPFA) 등 유사 동향 점검^{역동}
 - * 우리 배출권거래제(K-ETS)의 탄소비용 인정을 통해 CBAM 비용 부담을 일부 상쇄

2 전략적 수출 지원

◇ **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 강화**

1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

① (금융)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원 공급('24년 발표분 +5조원)

- (수주지원) **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규모 +10조원 확대***

* [現] '24~'28년간 총 85조원 → [改] 95조원

- (특화지원) **수출 다변화, 기간산업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확대**

다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산업(AI·바이오 등), 글로벌사우스 등 수출품목·지역 다변화시 금융우대 ▶ 해외발주처에 대한 선제적 한도제공 통해 우리기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'사전금융제도(무보)' 적용국가 확대, 중점 진출국가 보험료 할증률 완화 등 ▶ 주력시장 수출 피해기업에 대해 신규 바이어 발굴 위한 신용조사, 신속보상 등 '종합 패키지 지원' 방안 마련
기간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R&D·M&A·사업구조재편 등 자금지원 + 금융우대 통해 기간산업 지원 ▶ 수출 대기업(자동차 등) 납품 협력사 대상 제작자금 우대보증 신설
미래 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내해상풍력,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부문 정책금융 적극 참여, 저탄소 품목 전환·고도화시 정책금융 우대 ▶ ESS 이차전지 맞춤형 무역보험 심사방식 도입(전용 특약 신설, 심사기준 다양화)

② (재정)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(2.1→2.9조원)을 바탕으로 **新수출** 사업을 육성하고 품목·지역 다변화 도모

* 원전·방산·콘텐츠글로벌리그 펀드 신설,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확대 등

③ (세정) **수출 중소기업(수출/매출 비중 50% 이상)에 대한 법인세·부가세·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(~'25)**

* ①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(3→6월), ② 부가세 조기환급(15→10일), ③ 정기 세무조사 제외

②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·중견 등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

① (유동성 공급) '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'을 신규 도입(상반기)하여 통상·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에 적기 유동성 공급

* 업종에 따라 대출금리 최대 $\Delta 1.2\%p$ 인하 및 대출한도 최대 10% 확대

② (경제협력 강화) 주요국과 제3국 시장 공동진출, 상호투자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추진

③ (환리스크 대응) 시중은행과 협의해 외화결제·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, 금융·재정지원 강화

▪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(1.2→1.4조원)하고, 기업당 한도 확대 조치(최대 100→150%) 6개월 연장(~'25.6)

▪ 긴급경영안정자금(기업당 최대 10억원), 보험·보증 가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(한도 1천만원) 등 통해 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

④ (물류애로 해소) 해상물류 루트를 다변화하고 국적선사와 협력해 수출입 물류애로를 선제적·적극적으로 해소*

* 물류경색 발생시 임시선박 투입, 중소기업용 선적공간 제공, 수출바우처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등

▪ 글로벌 주요 공급망 거점에 공동 물류센터 확대* 및 민관합동 K-물류 TF('25~)를 통해 중장기 물류 공급망 마스터플랜 수립(상반기)

* 네덜란드·스페인·인니·美서안 → 美(3개소), 동유럽 등 신흥시장 추가 확보

⑤ (품목별 지원 강화)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화장품, 농식품, 공공조달 등에 대한 수출·위조상품 대응 지원과 해외마케팅 강화

▶ [K-뷰티] 천연원료 안전성 평가 정보(3→15종), 수출 유망국가 피부·유전체 정보(18→19개국) 제공, K-beauty 홍보관(2개소) 운영, K-뷰티 국제박람회·글로벌 K-뷰티 펀드 조성

▶ [K-푸드*] 온라인 한국식품관 입점, 농·임산물 생산전문단지 내실화, 스마트팜 수출 실증사업 지원, K-푸드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및 위조상품 현지단속 등

▶ [공공조달 혁신제품] 해외 공공시장에서 성능 및 품질 검증, 혁신제품을 활용한 ODA 추진

▪ 주력업종 수출전시회, 컨퍼런스 등을 계기로 수출상담회를 상시 진행하고, 10대 무역사절단 등 추진

* 중남미 스마트시티로드쇼(3월), 한-태 스마트시티데이(6월), 바이오 USA 한국관 운영(6월) 등

◇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다각적·전방위 지원 강화 ^{역동}

① 국내 생산지원 확대를 통한 공급망 내재화 추진

① (투자단계)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·증설시 외국인투자·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

- * 외투 현금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추가, 지원비율 가산(최대 +10%p)
- ** 선도사업자 등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투자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(소부장 특화단지 입주기업 수준, +2%p)

② (생산단계) 특정 高위험 경제안보품목*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·수입다변화·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지원 프로그램 신설

- * 공급망 위기 발생시 경제·산업 측면 막대한 피해 예상되나, 대응수단 부족한 품목

②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지원

① (연계지원) 민관합동 '핵심광물 투자 협의회'*를 통해 사업발굴 등 정보제공·컨설팅 및 대출·투자·보증 등 필요자금 패키지 지원

- * 기재·산업·외교부, 광해공단, 지질연, 에너지공단, 해외자원산업협회, 무보, 수은 등 참여

② (공동투자) 공급망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민관 공동투자*를 추진('25년)하고, 연도별 수요에 따라 장기투자 추진

- * [직접투자] 민간수요에 따라 기업과 함께 하는 직접투자 추진
[간접투자] 프로젝트 펀드(사모)에 앵커투자자로 참여, 민간 투자자 참여 유도

- 해외투자보험을 통해 무보가 일부 리스크(비상위험)를 분담하여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

③ 공급망기금, 소부장 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등 다각적 재원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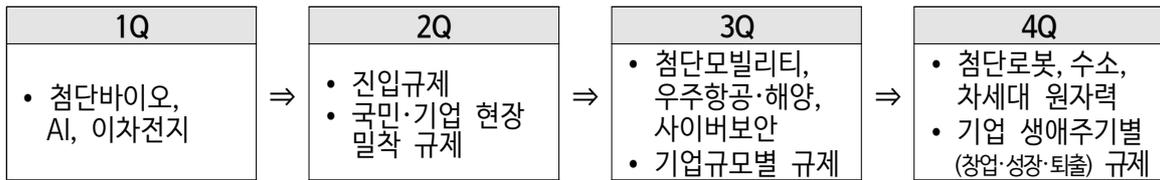
① (기금) 3년간 기금공급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·중견 대상 기금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'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' 신설

② (특별회계) 지원분야를 공급망 안정, 수입위험 완화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단계별로 상호 연계

[Box2] 글로벌 산업 생태계 중추국가 도약 위한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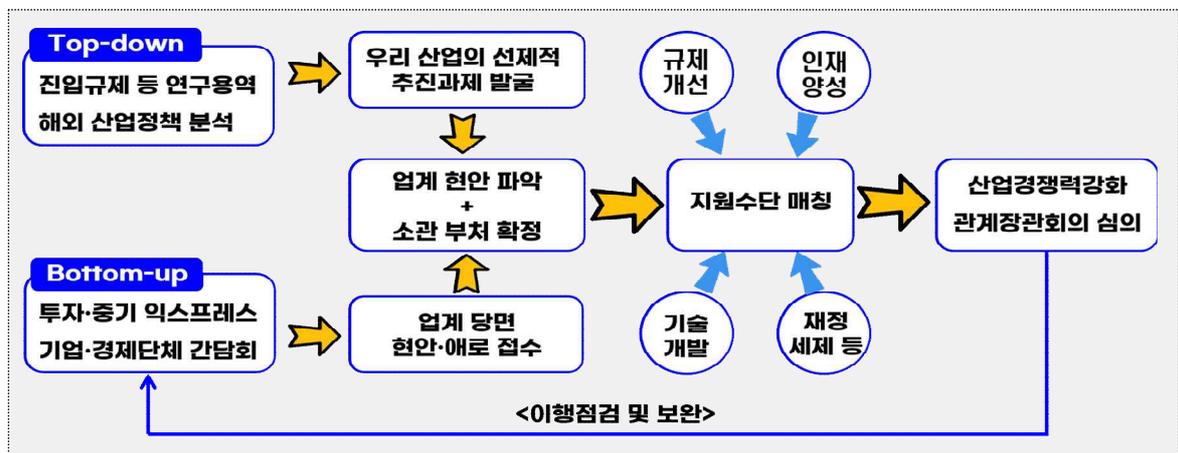
- ① (거버넌스)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·운영
- ② (과제 발굴) 업계 현안과 구조개선 과제를 투트랙으로 상시 파악
 - Top-down 신산업 진입 저해 규제 전수조사, 해외 산업정책 분석과 Bottom-up 투자·중기 익스프레스, 기업·경제단체 간담회 등 병행
 - * 기업의 주요 프로젝트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접수·해결하는 민관 핫라인 가동
- ③ (지원 확충) 정책수단 연계로 기업의 초격차 확보 투자 뒷받침
 - 산업 간 융합 증가, 新유형 산업 출현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게 분야별 혁신방안을 연중 순차적으로 수립·발표^{역동}

['25년 규제혁신 분기별 추진계획(안)]



-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기존 방식과 다른 파격적인 재정·금융·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첨단 기술개발, 전문인력 확보 적극 지원

[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세스]



1 주력산업 혁신

◇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해 주력 산업별 맞춤형 지원 강화

1 [반도체] 패권경쟁 주도권 확보 위해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가속화

- ① (재정·세제)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, 기반시설과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재정·세제 지원방안 구체화
 - 용인·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이중화 비용(총 1.8조원 수준)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 적극 분담
 -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(현행 500억원) 상향 추진
 -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(+5%p)
- ② (금융) 최저 2%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 4.25조원을 지원하는 등 '25년 14조원 이상 정책금융* 지원
 - * 산은, 기은, 수은, 무보, 신보, 기보 등 6개 정책금융기관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포함
- ③ (인프라) 투자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밀착관리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, 전력·용수·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신속조성 추진
 - * (전력)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송변전 설비계획 반영
(용수)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 추진 中('24.7~), 기본·실시설계 용역 시행('25~)
(도로)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, 설계시공 일괄입찰(던키) 발주('25)
 -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, '25년부터 보상 절차를 본격 착수해 부지조성 착공('26.下) 추진

2 [이차전지] IRA 불확실성 대응과 소재·광물의 내재화·다변화 추진

- ① (IRA 불확실성 대응) IRA 혜택 축소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對美 통상 대응체계 구축·운영*
 - * ①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별 업계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(1분기)
 - ②국내기업 투자지역 중심으로 민관합동 對美 소통 등

② (자금지원) 정책금융 공급 확대 및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지원

- 차세대 배터리 개발, 배터리 관련 신시장 진출 등에 따른 기업 자금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 추진
-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전력·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국비 지원 지속('25년 252억원)

③ (공급망안정화) 공급망 안정화 기금, 국제협력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·광물의 내재화·다변화 기반 조성

③ (조선) MRO 등 신수요에 적극 대응, R&D·인력·소부장 지원

① (MRO) 미국 등 MRO 수요확대에 대응한 지원체계 마련

- 군함·상선분야 협력 강화, 인력교류 활성화, 스마트야드 기술 공유 등을 포함한 韓·美 협력 패키지 마련(1분기)
- 군함 등 MRO 수주 활성화를 위해 우대금융 지원

* (무보) MRO 수주기업 대상 보증료 최대 20% 감면
(수은) 우대금리 제공(최대 $\Delta 1.2\%$)

② (신사업 지원) 친환경 선박 R&D 및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지원

- 친환경 선박 화물창, 무탄소 추진선박 등 핵심기술 R&D를 지원하고, 암모니아 병커링선 기자재 실증 추진('25~'28, 950억원)*

* 암모니아 엔진, 연료공급 시스템 등 실증 위한 선박 건조

- 중소조선사 디지털전환 기술보급 및 재직자 교육 지원

③ (기반 조성)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및 기자재 산업 육성

- 조선업 E-7 외국인력 허용비율 특례(내국인의 20→30%) 상시화
- 핵심부품 국산화 등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방안 마련(상반기)

④ [철강] 고부가·저탄소 전환과 무역장벽·불공정행위에 적극대응

① (생산체계 전환) 글로벌 철강시장 재편*에 대응해 고부가·저탄소 기술 개발,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계획 마련

* ①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, ②탄소중립 강화(예: EU 탄소국경조정제도) 등 통상환경 변화

-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('26~'30, 8,850억원) 예타 진행, 고부가 특수강 개발 위한 신규 R&D 프로젝트 기획
- 중소·중견 철강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AI 기술 지원을 위한 철강·금속 디지털전환(DX) 실증센터 구축('24~'28)

② (통상 대응)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기조,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

- 추가 수출규제 발생시 민·관 협의체를 가동해 품목별 영향 분석 및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
- 반덤핑 조사, 원산지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 무역행위 적극 대응

⑤ [자동차] 민관 공동 무역이슈 대응, 기술혁신·친환경차 전환 지원

① (무역변화 대응) 민관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, 보편관세 부과, 수출규제 강화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

- 對아세안, 對중동 등 수출 다변화와 현지생산·판매처 확보 추진

② (수요 회복) 전기·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친환경차 편의 제고

* (전기) 스마트제어 충전소 9.5만대('24년 2.3만대) / (수소) 충전소 68개소('24년 62개소)

③ (경쟁력 강화) 후발국 추격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로드맵 수립(상반기) 및 저리 정책금융 지원 확대*

* 산은기은신보 정책금융('24~'25, 조원): (미래차) 4.4 → 5.0, (부품산업 전환) 7.3 → 8.0

⑥ [석유화학] 경쟁력 강화 및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

① (경쟁력 강화) 민·관 합동 석화산업 협의체*를 상설화('25~)하여 사업재편, 친환경·고부가 전환 등 경쟁력 강화 방안 지속 협의

* 민·관 합동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('24.4월 출범): 산업부, 업계, 전문가 등

② (사업재편 활성화)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체계 구축

-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심사기간 단축(최대 120일 → 90일)
- 여수, 울산, 대산 등 주요 산단별로 '찾아가는 설명회'를 개최하고, 사업재편 절차·인센티브 등 안내 및 컨설팅(1분기)

③ (설비합리화 대응) 선제대응 통한 고용·지역경제 영향 최소화

-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현실화*하고, 설비 합리화 등으로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지정(상반기)

* 주된 산업 특성과 지자체 위기극복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개정

[「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('24.12.23)」 주요내용]

▶ (사업재편 지원)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(3년→5년, 기활법 개정), 과세이연 기간 연장(선제대응지역 한정)*, 고용유지지원금·사업구조전환지원자금 등 지원

* 금융채무상환 또는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 연장
(4년 거치, 3년 분할 → 5년 거치, 5년 분할)

▶ (원가경쟁력 제고)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 무관세 연장(~'25년), 공업원료용 LNG 석유수입부과금 환급(하반기), 에탄 적기수입 위한 인프라 구축('26~'28) 지원 등

▶ (고부가·친환경 전환) 탄소감축 핵심기술, 고부가 소재 등 R&D 지원 확대, 친환경시장 확대 위한 제도개선(예: '28년까지 퇴비화 분해 조건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 연장) 등

→ '25년초 업계 자율로 사업재편 방향에 대한 컨설팅 용역 추진하고,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석화산업 추가 지원방안 마련(상반기)

◇ 신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성장동력 확보

① [신산업] 3대 게임체인저 육성 위한 혁신전략 수립·착수^{역동}

【 <AI> G3 도약 위한 인프라 확충, 사업화·상용화 기반 조성 】

① (인프라)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*, AI컴퓨팅인프라 확충, AGI R&D, 데이터센터 규제개선** 등 포함한 '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' 수립(1분기)

* AI반도체(NPU, PIM 등) R&D 지원('25년 0.4조원) → 향후 센터 구축시 국산 AI반도체도 활용

** 예) 항만 내 데이터센터 입주 허용 위한 「항만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

② (법·제도 정비) AI 기본법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* 조기 추진(상반기) 및 AI 관련법의 단계적·유기적 정비체계 마련

* 「AI기본법」 하위법령 제정, AI융합 촉진 시책 마련, 고영향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

③ (활용 확산)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해 AI 기술의 사업화·상용화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AI 핵심인재 양성·확보도 추진

* 「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방안」 발표(1월) / 「AI 핵심인재 양성·확보 방안」 발표(상반기)

【 <바이오> 기술·제조 혁신과 클러스터 운영 효율화 지원 】

① (전략 수립)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과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^{가칭}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*을 상반기 내 수립

* 주요내용(안): AI 활용 바이오 R&D 혁신, AI 바이오 인프라 확보 및 인재양성, 바이오 데이터 확보·관리·연계 강화, AI융합 바이오 법제 기반 마련 등

② (제조 혁신) 공공 바이오파운드리* 구축('25~)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

* 기존 바이오 R&D 방식을 자동화·고속화·표준화할 수 있는 첨단기술(AI·로봇 등) 기반 인프라

【 <양자> 핵심기술 선점, 산업화 기반 마련 】

① (추진체계)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고 양자과학 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마련(하반기)

② (인프라) 양자 전문인력 양성, 테스트베드 등 연구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한 출연연 중심(산·학 참여)의 연구거점 지정(상반기)

③ (R&D) 양자 핵심기술 확보 플래그십 프로젝트(예: 1,000큐비트 양자컴 등)에 착수, 양자센서 상용화 등 소재·부품 국산화 추진

② [서비스] 산업구조, 강점·기회 등 고려해 新서비스업·서비스수출 육성^{역동}

① (新서비스 육성) 친환경·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

- ▶ [친환경] 경제·사회 친환경화 대응 기후테크 서비스업 육성방안(상반기)
 - * 예) 탄소 포집·활용·저장(CCUS), 홍수 예측, 자원순환, 기후금융 등
- ▶ [디지털 전환] FAST* 등 유망 디지털 서비스 육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(상반기)
 - *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(Free Advertisement Supported Streaming TV)

② (스케일업) 중소서비스기업을 위한 규제혁신·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(상반기)하고, 유망 분야 국내외 규제수준 실태조사 실시(하반기)

- 연구용역*(~'25.3) 및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, 발전가능성이 유망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성장 지원방안 마련

* 규모화·표준화의 필요성·효과성이 높은 주요업종 선정 및 지원방안 검토

③ (업종별 수출 활성화) ①산업구조, ②강점·기회요인, ③국제경쟁력 등 여건을 반영해 주요 업종별 서비스수출 활성화 방안 수립

① (콘텐츠)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'글로벌리그 펀드*'를 조성하고,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(하반기)

* [모태펀드] 국내펀드에만 출자 → [글로벌리그 펀드] 역외펀드 조성('25년 신규, 1,000억원)

② (방산 MRO) K-방산 MRO 협의체·협력채널 구축* 등을 추진 ('25)하고, 함정·항공기 분야 MRO 수행범위 확대** 추진

* 美 현지지원체계(RSF) 활용, 다자·양자간 방산 MRO 협의체 수립·운영 등

** [現] 선체(함정)·기체(항공기) 등 플랫폼 → [改] 탑재장비

③ (ICT·SW) 디지털 수출개척단* 활동과 함께 서비스형 SW(SaaS) 해외진출** 지원 등 추진

* 중동·아세안 등 전략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해외진출 지원 추진

**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진입 및 세일즈 원스톱 지원

④ (서비스 무역통계) 콘텐츠·ICT 분야 서비스 수출입 동향 분석 및 맞춤형(업종·국가별) 정책수립을 위한 신규 무역통계 공표

◇ 전력, 첨단인재 등 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 적극 지원

① 전력망 특별법 등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구축

- ① (특별법 추진)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,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력망 특별법* 조속 입법 추진
 - * 총리주재 전력망위원회 설치, 인허가의제 통한 절차 간소화, 토지초 조기 협의 인센티브 강화 등
- ② (국가 역할 강화)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*
 - * 인허가 조속 추진,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정기관 운영, 경과지역 애로해소규제개선 등
 - 조정기관에서 개별 전력망별 애로해소 방안 마련 추진
- ③ (구축상황 점검)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진행 상황, 지연 사유 등을 상시 점검(월별)하고 중점 관리

② 재생에너지·수소 등 전력원을 균형 있게 확충^{역동}

- ① (보급 확산) 태양광·해상풍력 등 보급시 공공역할 확대, 비용저감, 공급망·안보 강화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 마련(1분기)
- ② (에너지 분산) 재생에너지 등 신규 에너지 설비가 허가 단계부터 지역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확대
 - 전력계통 관련 정보*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계통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·공개 및 편의성 강화
 - * 계통관리변전소(접속가능용량 부족으로 전력망 보강 이후 연계가능) 안내, 출력제어 현황 등
 - SMR 등 첨단 분산형 전원 관련 국제협력·R&D 강화
- ③ (수소경제) 일반수소 및 청정수소발전 입찰 지속, 수소특화단지 단계적 확대 검토*(현재 2개소) 등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 강화
 - * 수소산업 거점 육성 필요 지역을 예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(하반기)해 예타사업 기획·신청

③ 기후금융 활성화, 탄소시장 접근성 제고 등 탈탄소 대응 강화

① (기후금융) “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” 추진^{역동}

- ① (녹색국채) 발행근거 마련, 투자 프로젝트 선정, 추진 프레임워크 수립 등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 검토
- ② (녹색분류체계) 녹색투자의 기준을 제시하는 “한국형 녹색분류체계”를 기후분야 중심으로 개정(~25)
- ③ (전환금융) 기업의 저탄소 전환 위한 「전환금융 가이드라인」* 마련
* 예) 전환금융 개념·인정기준 및 기업 전환전략의 평가기준 등 제시

② (배출권거래제) 기본계획(‘26~‘35)에 “유상할당 확대” 방향성을 제시하고, 부문·업종별 유상할당 비율, 업종별 할당방식 등을 담은 할당계획 마련(‘25.6)

③ (탄소크레딧) 민관합동 탄소크레딧 시장 TF*를 구축하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탄소크레딧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^{역동}

* 기재·환경·산업·중기 등 관계부처 및 대한상의·전문가 등 참여

④ (NDC) 우리 경제·산업 여건, 미래세대·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2035 NDC 수립(~25)

⑤ (국제탄소시장)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 사무국과 ‘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’ 개발 추진(상반기 MOU 체결)

④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혁신촉진 및 경쟁력 고도화

① (첨단인재 유치) 「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」(1월 시행)을 기반으로 첨단산업분야 혁신기반 구축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* 추진^{역동}

* 정주·비자 혜택 등을 포함한 「K-Tech Pass」 세부안 마련 예정

-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특별비자를 신설하고, 해외 우수인재(K-Tech Pass 소지자) 소득세 50% 감면(10년) 적용

② (정착지원)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·증여세 관련 조세부담* 완화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^{역동}

* (현행) ①소득세: 최근 10년 국내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인 경우 국외소득 합산 과세
②증여세: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 증여시 거주자에게 과세

③ (교류확대)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·정착 지원*을 확대, 재외한인을 국내외 인재·기술 교류의 상설 민간대사로 활용

*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, 해외연구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사업 등

4 기업 투자환경 개선

◇ 금융·세제 등 지원강화, 현장규제 혁신을 통해 투자 뒷받침

①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시설자금 공급 및 인센티브 보강

① (정책금융) 역대 최대 55조원 시설투자자금 공급('24년 52조원)

[시설투자자금 공급 주요내역]

공급 주체	중점 지원분야·대상	규모(조원)
▶ 산업은행	노후기계 교체, 핵심기술 국산화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	24.8
▶ 기업은행	중소·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	24.0
▶ 신용보증기금	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,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	4.0

-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5,000억원 '항만 스마트화 펀드' 신규 조성(해양진흥공사)

② (세제지원)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하고, '25년 한시적으로 중소·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진

* [일반] <중소>10→12% <중견>5→7% / [신성장] <중소>12→14% <중견>6→8%

- '25년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소기업에 적용해 중소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

* 중소기업이 '25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준내용연수 단축

-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(AI), 미래형 운송수단* 추가

* 예)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선박, 자율운항 등 지능형 선박 기술 등 검토

- 첨단 R&D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*을 추진하고,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확대**

* R&D시설 투자에 대해 국가전략기술·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세액공제율 적용

** [대상] SW 대여·구입비, 연구·시험용 시설 임차료·이용료 등 추가

[공제율] 국가전략기술·일반 R&D 동시 수행 인력에 대해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공제

③ (재정지원)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투자건당 지원한도를 상향(100→150억원)하고 예산 규모도 6% 증액

* 지역 투자촉진 보조금(억원): ('24) 2,088 → ('25) 2,218
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가속화를 위해 최초 보조금 신청시 투자계획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보조금 지원

* 추가 보조금은 최초 지원결정금액의 10% 이내에서 정산시 지급

②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체감형 규제 혁신사례 확산

① (규제혁신 프로세스 강화) 투자와 산업혁신을 얻매는 규제혁신 프로세스 상시화 역동

- 기획형 규제샌드박스*를 現2개 → 改8개 분야**로 대폭 확대

* 규제개선 효과 큰 사업을 선제적 기획, 과제발굴하는 Top-down 방식 규제샌드박스

** [現] 산업융합, ICT → [추가] 혁신금융, 규제자유특구, 스마트도시, 연구개발특구, 모빌리티, 순환경제

- 규제혁신추진단이 지역별 순회(지역 경제단체 및 광역지자체 등)를 통해 현장밀착형 규제를 발굴·해소하고, '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' 가동*

* 중소기업인이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건의를 제출하면, 정부는 검토결과를 1개월 내 피드백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·가동(1월~)

② (현장으로 해소) 1~3차 투자활성화 대책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, 「4차 투자활성화 대책」을 상반기 중 발표

- '25년 중 35.3조원 규모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* 착공 등 기동지원

* 1·2차 투자 대책 중 '25년 착공 과제(9개) + 3차 투자 대책 중 '25년 착공 등 투자발생 과제(7개)

['25년 현장대기 프로젝트 진행계획(주요 예시)]

프로젝트명	규모(조원)	제도개선·애로해소	착공시기
▶ 전남 해상풍력 발전	10.2	습지보호지역 내 횡단 철탑 설치 허용	상반기
▶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	9.9	송전선로 착공(2차 대책) 및 염·폐수 처리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(3차 대책)	하반기
▶ 영일만 이차전지 특화단지	4.1	송전선로 구축 행정절차 단축	하반기
▶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	0.7	초기전력 조기 공급('26.1 → '25.6)	상반기
▶ 인천항 내항 1·8부두	0.6	사업계획 수립·고시 등 행정절차 속행 지원	하반기
▶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	0.4	산지협의 행정절차 기간 단축(9 → 3개월)	하반기

③ (체감형 규제혁신)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 확산을 통해 신규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투자기회 확대 역동

- 신규 업체들의 납세병마개 제조 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

* [現] 지정제 운영, 소수업체 제조 → [改] 등록제로 전환하여 다양한 업체들의 상시 진입 기대

- 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*, ② 제조용기 검정제도 간소화, ③ 전통주 제조원료 범위 확대** 등 주류제조 규제 완화 추진

* [現] 맥주·탁주·약주·청주·과실주 총 5종 → [改] 브랜드위스키 등 추가

** [現] 주원료(상위 3개 이내)로 지역농산물 사용 → [改] 일정비율 이상 지역농산물 사용

[Box3] 국토이용 효율화 위한 제도개편 및 선도프로젝트 추진^{역동}

- ① **(제도개편)** 토지이용제도 전반의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·이해관계자 등과의 공론화를 추진하고, **세부과제별 연구용역 신속 착수(1분기)**

※ 검토방향(안)

- ▶ [국토계획] **획일·경직적 용도지역 기반 제도 보완, 민간의 창의적 고밀·복합개발 유도**
- ▶ [농지제도] **고령화, 인구소멸, 상속 등에 따른 농지소유 분산 등 여건 변화를 감안,**
 - ① 농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농지 이용제도 개선 및 농지임대차 범위 확대,
 - ② 공동영농 활성화 및 정부·민간·농민참여 농업법인화 신규 모델 확산 방안 등
- ▶ [산지제도] **산지의 79%가 보전산지로 지정된 현행 산지분류 기준 적정성, 국민의 친화적 산지 이용을 위한 비합리적 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**

- ② **(선도프로젝트)** 국민 체감도 높은 **도·농·산 3대 프로젝트 추진**

- ① **(도시)**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**싱가폴·동경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한 고밀개발***, **외국인학교 설립 등 정주여건 개선 집중 추진**

* 도시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용적률 규제를 최대 1,700%까지 완화

- **서울시-정부-경제단체 합동 글로벌기업 유치단을 구성·운영하여 유치대상 기업으로부터 상향식(bottom-up) 희망 인센티브 조사·반영**

- ② **(농지)** 정부-지자체-민간 합작사업인 **충남모델 등 대규모 영농지대 조성 사업***을 신속 추진하고, **농지구모화를 위한 공동영농 활성화**** 지원

- * ①[충남 글로벌홀티컴플렉스] 서산 간척지 내 대규모(18.5만평) 농업 전용지를 조성하고, 국내외 농업기업이 정부-지자체와 공동 출자한 SPC를 설립하여 스마트팜 설치·입주
- ②[대규모 스마트농업단지] 정부가 남원시·고흥군에 대규모 스마트팜 부지(각 20ha)를 조성

** 농지위탁·임대차 등으로 인근 농지를 묶어 농업을 규모화·집단화할수 있는 '농지이용증진사업' 활성화

- **소멸위험 농촌지역 맞춤형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, 국민의 농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확산 추진**

- ③ **(산지)** **산림속 휴양시설의 대대적 확충을 목표로 산지이용 중첩 규제 완화 및 대형 민자사업 모델 도입 검토**

* (규제완화) 산림휴양법 등 법령에 산재한 휴양림, 야영장 등 설치 기준 정비 (민간참여) 벤처펀드 등 정부자금 연계, 국내외 주요 아웃도어 기업 참여 유도로 민자사업 활성화

5 중소·벤처기업 활성화

◇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벤처·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추진

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^{역동}

- ① (스케일업)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('25.2)하고 오픈바우처, 정책자금, 제조시설 스마트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
- ② (M&A 활성화) M&A 거래시장 활성화, 공공·민간 협력체계 구축, 참여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 M&A 활성화 방안 마련
 - M&A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칭기업승계법 제정을 추진 (상반기 공청회·설명회 개최)하고 종합적인 M&A 지원체계* 구축
 - * (공공) 기업승계지원센터 신설, 기존 M&A 지원센터(VC협회) 등 연계 → 중소기업 M&A 지원 (민간) M&A 중개기관과 기업승계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→ 대·중규모 M&A 지원
- ③ (자금 지원)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약 11.3조원 공급
- ④ (기술사업화) 범부처 협업을 통한 국가R&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,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추진
- ⑤ (공정거래) 혁신 중소기업 대상*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기술유용 근절
 - * 소프트웨어·콘텐츠·산업기계 분야 등

② 외국인 창업, 해외진출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

- ① (외국인 창업 촉진) 해외 창업가 발굴 경로를 다각화(K-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, K-스카우터, 재외공관 등)하고, 심사요건을 완화한 신속 창업비자* 도입
 - *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설('24.12)
- ② (해외진출 지원) 창업기업, 투자자, 지원기관들이 모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'글로벌 창업허브' 구축(서울·부산, '26~)
 - 해외진출 高 수요국에 무역사절단(산업부), K-혁신사절단(중기부) 등 파견
- ③ (수출경쟁력 확보) 현지 클라우드 비용, 소프트웨어 현지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신설(400개사, 최대 5천만원)
 -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 수출 용자자금 약 2배 확대*
 - * 신시장진출지원자금: ('24) 2,005억원 → ('25) 3,825억원(+1,820억원, +91%)

③ 테크기업·유망벤처 육성, 스마트 제조기반 등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

① (테크기업 지원) 초격차 10대 분야* 스타트업 지원 확대('25년 500개 이상)

* ①시스템 반도체, ②바이오·헬스, ③미래 모빌리티, ④친환경·에너지, ⑤로봇, ⑥빅데이터·AI, ⑦사이버보안·네트워크, ⑧우주항공·해양, ⑨차세대원전, ⑩양자

▪ 5대 고성장 분야* AI 스타트업 집중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** 신설

* [기술] sLLM, AI 팹리스 [산업] 제조, 헬스케어, 문화·콘텐츠

** 대기업-AI 스타트업 협업 챌린지 개최, 글로벌 AI 펀드 조성, 전문인력 창업지원 등

▪ 원천기술 사업화, 스케일업,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「가칭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」 마련(1월)

② (유망벤처 육성) 스케일업 가속화를 위해 TIPS 성공기업에게 투자와 연계한 보증·융자*를 지원하고, 포스트 TIPS 지원 확대**

* 10억원 이상 후속투자 + 보증·융자 등 1:1 매칭(10억) 지원 (민간은행)

** 성공판정 최상위 달성 기업 대상 2년 간 최대 5억원 → 7억원

▪ 우수 벤처·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을 매칭하고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“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*” 신설

* 기술 최적화, 글로벌 진출, 대기업 프로그램 연계 및 모태펀드 1:1 매칭투자 지원 등

③ (지역 제조혁신) 지역 현장의 정책수요에 부합하도록 중앙-지자체가 예산을 공동 매칭·기획하는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추진('25~)

④ 벤처 투자자 확대, 지역투자 활성화 등 벤처 생태계 확장

① (금융지원 확대) 벤처·스타트업 '25년 정책금융 2.5조원 중점 지원

▪ 신속한 벤처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 내 공고 완료하고 상반기 조기출자 추진

▪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·공제회에 출자 인센티브* 제공(LP첫걸음펀드)

* (예시) 모태펀드가 펀드 손실액의 10% 우선 부담, 펀드 지분의 30% 풋옵션 제공

② (지역투자 활성화) 모태펀드·지자체·기업·지방은행 등이 참여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 신설(1조원, '25~'27)

▪ 중기부·행안부·지자체 간 ‘지역 벤처투자 협의회’ 신설(1분기), 지방 순회 IR 개최 등 지방 벤처투자 인프라 확충

[Box4] 「역동경제로드맵(‘24.7.3)」 추진성과 및 ‘25년 추진계획

① [추진배경·경과] 경제 역동성 회복 위한 구조개혁 본격 착수

① 우리 경제는 과거 성장-분배 선순환의 모범 사례였으나, 잠재성장률 하락, 사회이동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 직면
⇒ 향후 10년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시기라는 인식 하에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 긴요

② ①혁신생태계 강화, ②공정한 기회 보장, ③사회이동성 개선
3대 축으로 「역동경제로드맵」 발표(‘24.7.3)하고 주요 대책 추진*

* 전체 175개 과제 중 26개 이행완료, 140개 정상추진, 9개 일정조정(‘24.10월 점검결과)

② [‘24년 추진성과] 구조개혁 공론화 및 단계적 이행

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3년간의 단계적 이행전략 마련

② 지난 6개월간 로드맵 上 계획된 주요 세부대책 발표,
일부과제 연구용역·공론화 착수 등 구조개혁 기반 구축

[‘24년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주요 세부대책]

- ▶ 1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(‘24.5)
- ▶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(‘24.6)
- ▶ 통상정책 로드맵(‘24.8)
- ▶ 벤처투자 활성화방안(‘24.10)
- ▶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(‘24.11) 등
- ▶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(‘24.6)
- ▶ 소상공인 대책(‘24.7)
- ▶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(‘24.8)
- ▶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(‘24.11)

③ [‘25년 추진계획] 2025년 경제정책방향 분야별 반영 [참고1]

- 로드맵 과제를 ‘25년 경제정책방향의 민생경제 회복,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등으로 구체화
- 인구·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과제 발굴·보강

👉 ‘25년에도 우리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

< 저출생·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과제^{역동} >

① (일·가정 양립)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, 맞돌봄 시 휴직기간 연장, 육아휴직 통합신청 등 수요자 친화적으로 육아휴직 제도 개선*

- * 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(現 150만원 → 改 최대 250만원)
- ②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
- ③ 출산휴가 신청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가능

▪ 일·가정 양립 제도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*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,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

- * ①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 확대(육아휴직 대체인력 추가 등) 및 지원금 인상(월 80→120만원)
- ② 육아기 근로자 대상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(월 10~40 → 20~60만원)
- ③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(월 20만원)

② (양육)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(중위소득 150→200%), 정부지원비율 상향 등 지원 확대

'24년				'25년			
소득기준 (기준중위소득)		정부지원 비율		소득기준 (기준중위소득)		정부지원 비율	
		0~5세	6~12세			0~5세	6~12세
가	75% 이하	85%	75%	가	75% 이하	85%	75%
나	120% 이하	60%	30%	나	120% 이하	60%	40%
다	150% 이하	20%	15%	다	150% 이하	30%	20%
라	150% 초과	-	-	라	150%초과~ 200%이하	15%	10%

▪ 아이돌보미 대기 및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·민간 돌보미 공급 확대('27년까지 약 30만 가구 목표)

- * ① 등·하원(교) 서비스 신설(노인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인력 공급)
- ②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의 아이돌보미로 활동 허용 등

③ (주거 등) 결혼·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*하고, 결혼 세액공제 신설,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신설·확대

- * ① 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(연 1.3억원→2.5억원)
-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
- ③ 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부여,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

▪ 임신 초기(~11주)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(5→10일)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 신설(유급, 3일)

④ (상속세)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공제 확대 등 개편 추진

참고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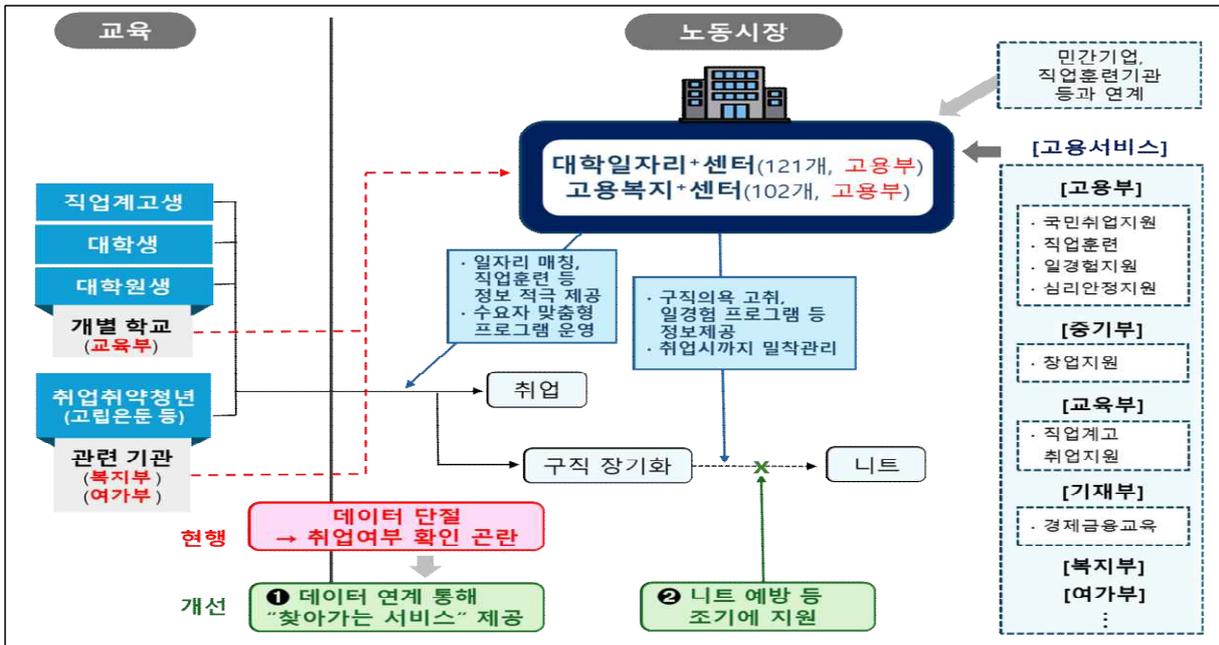
'25년 역동경제 중점 추진과제

구분	'25년 추진계획	비고
【1】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	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▶ 중소기업 M&A 활성화 방안 마련 ▶ 가칭기업승계법 제정 추진	산업
	② 서비스 新산업 육성 ▶ 기후테크 서비스업 육성방안 수립(상반기) ▶ 유망 디지털 서비스 육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(상반기) ▶ 중소서비스기업 규제혁신·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(상반기) ▶ 주요 업종별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수립(콘텐츠, 방산 MRO, ICT 등)	산업
	③ 디지털 대전환 ▶ (AI)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·확산 방안 발표(1월) AI 핵심인재 양성·확보방안 발표(상반기) ▶ (바이오)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 수립(상반기)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(상반기) ▶ (양자) 양자 과학기술·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마련(하반기)	산업
【2】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	① 노동 ▶ (첨단산업인재) K-Tech Pass 세부안 마련 ▶ (재외국민)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조세부담 완화방안 마련	산업
	② 자본 ▶ (밸류업)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(주주환원촉진세제 등) 상장폐지 절차개선(저성과기업 효율적 퇴출), 자본시장법 개정 ▶ (국채시장)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 추진 ▶ (외환시장)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(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 등), 중개 인프라 선진화(다수 기관 호가 확인·거래 시스템 마련 등)	신인도
	③ 토지 ▶ 도·농·산 3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- 용산 고밀개발, 대규모 영농지대 조성, 산지이용 중첩규제 완화 ▶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(소급 적용 가능)	산업 신인도
【3】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	① 新대외경제전략 ▶ 글로벌사우스 등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 ▶ EU CBAM, 美 해외오염관세법안 등 新통상규범 대응	통상
	② 공급망 안정 ▶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공급안정 위한 공급망 지원프로그램 신설 등	
【4】 균등한 기회	① 규제 전면 정비 ▶ 분야별 규제혁신방안 연중 순차적 수립·발표 - ^(1Q) 첨단바이오·AI → ^(2Q) 진입규제, 국민·기업 현장밀착형 규제 → ^(3Q) 기업 규모별 규제 → ^(4Q) 기업 생애주기별(창업·성장·퇴출) 규제 등 ▶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확대(2 → 8개)	산업
	②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·해소 ▶ 지역 경제단체-규제혁신추진단 지역별 순회 ▶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 → 등록제 전환 ▶ 주류제조 규제 완화 추진	

구분	'25년 추진계획	비고
【5】 정당한 보상	① 노동약자 권익보호 ▶ 가칭노동약자지원법 제정 ▶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,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	민생
	② 일-생활 균형 ▶ 휴일제 개선방안 마련(1Q연구용역 → 2Q-4Q사회적논의) ▶ 평생학습휴가 도입 인센티브 검토	
【6】 능동적 상생	① 플랫폼 ▶ 상생성장지원자금(K-커머스론) 신설	민생
	② 상생금융 ▶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추진	
【7】 가계소득· 자산 확충	① 소득 ▶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본격 가동 ▶ “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”(일경험 기회 +1만명 등)	민생
	② 자산 ▶ 청년 자산형성 촉진 패키지(청년도약계좌 금융투자상품 거래 허용방안 검토 등) ▶ 단계적 의무화, 수익률 제고 등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	
【8】 핵심 생계비 경감	① 먹거리 ▶ “구조적 먹거리 부담완화 4종 패키지” - (해외생산) 곡물 공급망 확보 금융지원 종합방안 마련(상반기) - (수급예측) 수요변화 반영 수급예측 모델 개발(~'26) - (유통개선) 온라인도매시장 지원체계 고도화('25), 계약재배 쏠단계 온라인화 추진 - (인재유입)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(지원전문기관 등)	민생
	② 주거 ▶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(10개소) → 청년임대 2천호 공급	
	③ 의료 ▶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방안 마련(상반기 연구용역) ▶ 간병서비스 표준지침 최종 마련·시행(하반기)	
【9】 교육 시스템 혁신	① 사회통합전형 등 제도개선 ▶ 지역균형 입학전형 내실화(지역 소재 학생의 대학 진학기회 등 확대) ▶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(RISE) 등 통해 대학개혁 지속 추진	민생
	② 직업계고·직업훈련 강화 ▶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(17→24개) ▶ 직업훈련기관 훈련 품질 및 성과 제고방안(상반기 연구용역)	
【10】 약자보호· 재기지원 강화	① 사회서비스 ▶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성장 지원방안 마련	산업
	② 근로유인 확대 ▶ 기초생보 소득평가시 노동시장 참여 등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방안 마련	민생
【+α】 인구위기 극복	① 일·가정 양립문화 조성 ▶ 수요자 친화적 육아휴직 제도개선	-
	② 양육 등 부담 완화 ▶ 공공·민간 돌보미 공급 확대(~'27년까지 약 30만 가구)	
【+β】 저탄소 전환 가속화	① 기후금융 ▶ “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” 추진 - (녹색국채) 녹색국채 발행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 - (녹색분류체계)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면 개정 - (전환금융)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	산업
	② 재생에너지 ▶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 마련(1분기)	
	③ 탄소크레딧 시장 조성 ▶ 탄소크레딧시장 가이드라인 마련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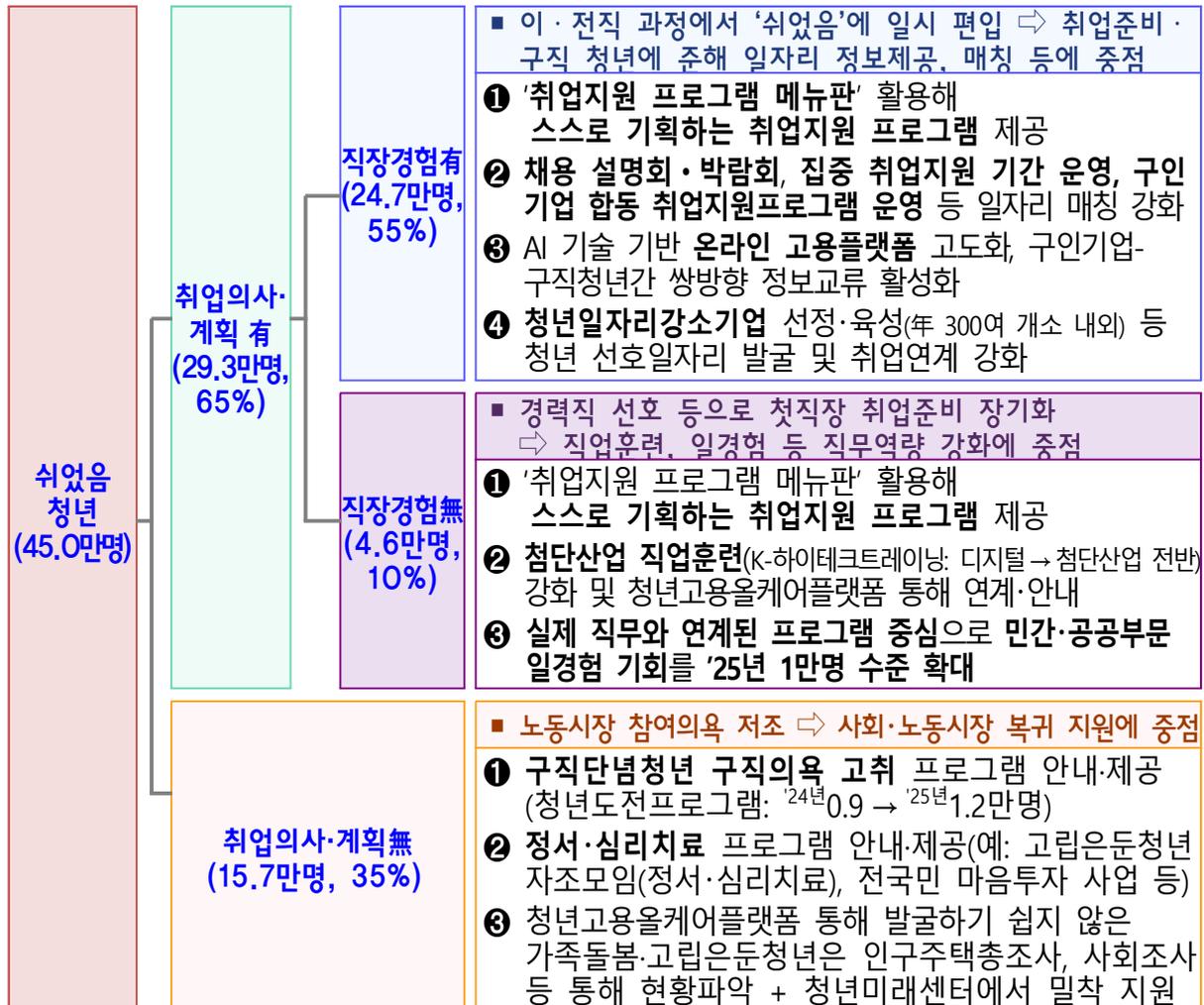
참고 2

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체계도



참고 3

'쉬었음' 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도



* '24.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(통계청) 기준 / 근로능력 없다고 응답한 1.0만명 제외

참고 4

ISA 선택권 확대 기대효과

※ [기대효과] 투자자 선택권 확대 ☞ 다양한 ISA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

- (예시1) 은행에서 ①신탁형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이 안정적인 예적금에 투자하면서
②일임형 계좌를 개설하여 전문가에게 주식형·채권형펀드 등 운용하도록 일임

①신탁형 계좌
(예적금 등)

+

②일임형 계좌
(주식형·채권형펀드 등)

- (예시2) 증권사에서 ①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·ETF 등을 직접 거래하면서,
②일임형 계좌를 개설하여 전문가에게 주식형·채권형펀드 등 운용하도록 일임

①중개형 계좌
(주식·ETF 등)

+

②일임형 계좌
(주식형·채권형펀드 등)

- (예시3) 증권사와 은행이 서로 제휴한 경우, 증권사에서 ①중개형 계좌 개설, 은행에서 ②신탁형 계좌 개설,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③일임형 계좌 개설하여 계좌별 특색에 맞는 자산 운용

①증권사 중개형 계좌
(주식·ETF 등)

+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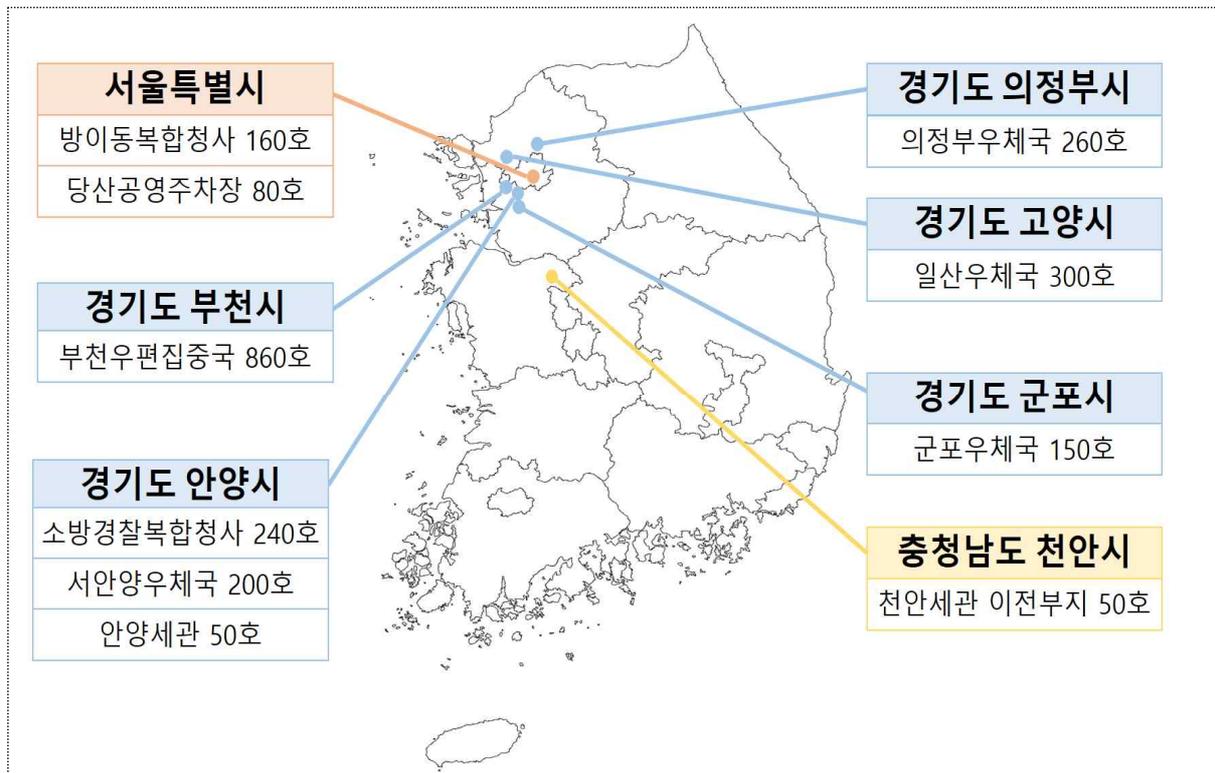
②은행 신탁형 계좌
(예적금 등)

+

③은행 또는 증권사 일임형 계좌
(주식형·채권형펀드 등)

참고 5

노후청사 복합개발 청년임대 Map



1. 대외 여건

□ 고물가·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, 세계경제 불확실성 상당

- (성장)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등이 완만한 성장세를 뒷받침 하겠으나, 美 신정부 정책전환 등이 주요 변수

* '24→'25년 세계경제 전망(% , IMF<'24.10월>): (성장)3.2→3.2 (교역)3.1→3.4

- 그간 고물가 영향이 컸던 유럽은 '24년 대비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, 미국과 중국은 성장세 둔화 전망

* (미국)'24년의 성장 호조세가 다소 완화 / (중국) 부동산·내수 부진 장기화 영향

- 향후 주요국 통상·산업정책의 전개양상 등에 따라 세계 성장·교역 경로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

* 美 정책변화 양상(관세·이민) 등에 따라 '25년 세계성장률에 최대 △0.8%p 영향(IMF, '24.10월)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% , IMF<'24.10월>)

	전세계	선진국	미국	유로존	일본	신흥국	중국	인도
'24년 ^e	3.2	1.8	2.8	0.8	0.3	4.2	4.8	7.0
'25년 ^e	3.2	1.8	2.2	1.2	1.1	4.2	4.5	6.5

- (물가) 국제유가 하락,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 전망

* 국제유가(\$/b, 두바이유, 자체추정) : ('22) 96 → ('23) 82 → ('24) 80 → ('25^e) 73

- 다만, 지정학적 변수 등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,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

주요국 물가상승률 전망(% , IMF<'24.10월>)

	전세계	선진국	미국	유로존	일본	신흥국	중국	인도
'24년 ^e	5.8	2.6	3.0	2.4	2.2	7.9	0.4	4.4
'25년 ^e	4.3	2.0	1.9	2.0	2.0	5.9	1.7	4.1

- (금융시장)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,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속도, 강달러 지속 여부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

2. 국내경제 전망

1 경제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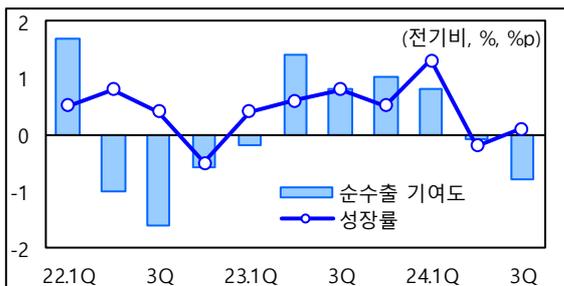
① (GDP) '24년 2.1%, '25년 1.8% 성장 전망

- ('24년)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, 상반기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 하반기 둔화되면서 2.1% 성장 전망

* 경제성장률(전년동기비<전기비>, %): ('24.1Q)3.3<1.3> (2Q)2.3<△0.2> (3Q)1.5<0.1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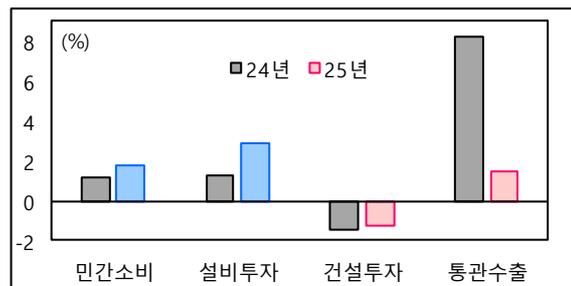
- ('25년) 수출을 중심으로 '24년보다 성장률 둔화 전망
 -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,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 약화 예상
 - 내수는 고물가·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·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, 건설투자는 감소세 지속 가능성

성장률 및 순수출 기여도 추이



* 출처: 한국은행

'24→'25년 컴포넌트별 전망



* 출처: 자체 추정

【경상GDP : '24년 5.9%, '25년 3.8% 성장 전망】

※ 경상성장률(%): ('23)3.3<실질성장률1.4+디플레이터 상승률1.9> ('24^e)5.9<2.1+3.8> ('25^e)3.8<1.8+2.0>

- ('24년) 반도체가격 상승, 국제유가 하락 등 교역조건 개선으로 디플레이터가 큰 폭 상승하며 5.9% 성장 전망
- ('25년) 성장률 하락, 소비자물가·반도체가격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터 상승폭 축소로 '24년보다 낮은 3.8% 성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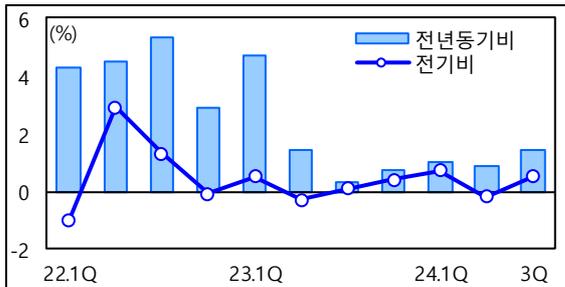
* 반도체가격 상승률 전망(%, '24→'25년, Gartner): (D램)56→10 (낸드)60→△3

② (민간소비) '24년 1.2%, '25년 1.8% 증가 전망

- ('24년) 고물가·고금리 영향이 누적되면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속도가 더딘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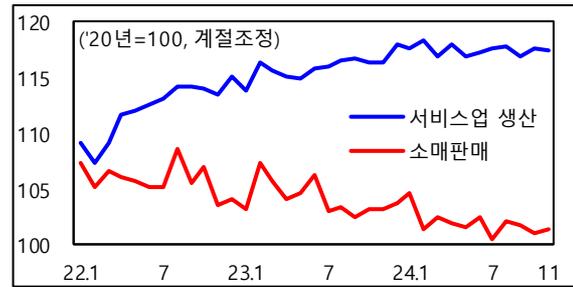
* 민간소비(전기비, %): ('23.3Q)0.1 (4Q)0.4 ('24.1Q)0.7 (2Q)△0.2 (3Q)0.5

민간소비 추이



* 출처: 한국은행

소매판매·서비스업 생산 추이



* 출처: 통계청

- ('25년) 가계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며 점차 회복 전망

- 고물가·고금리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, 이자지출 증가 등 소비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의 완만한 개선 뒷받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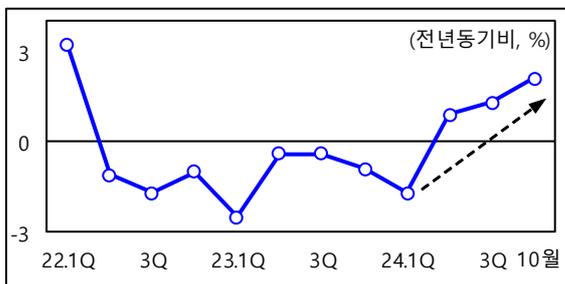
*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, %): ('24.1Q)3.0 (2Q)2.7 (3Q)2.1 (4Q)1.6

* 이자지출(전년동기비, %, 명목): ('23.3Q)24.2 (4Q)20.0 ('24.1Q)11.2 (2Q)△4.8 (3Q)△9.9

* 실질소득(전년동기비, %): ('23.3Q)0.2 (4Q)0.5 ('24.1Q)△1.6 (2Q)0.8 (3Q)2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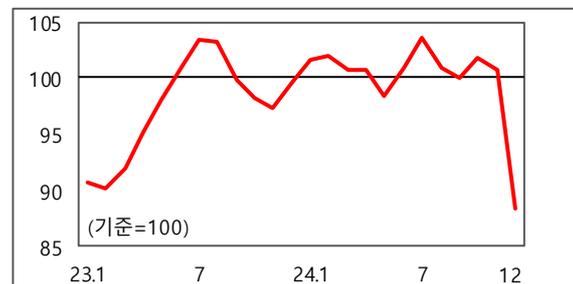
- 다만,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개선폭 제약 가능성

실질임금 증감률 추이



* 출처: 고용노동부

소비자심리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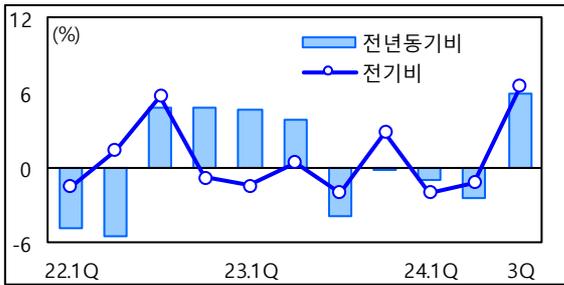
* 출처: 한국은행

③ [설비투자] '24년 1.3%, '25년 2.9% 증가 전망

- ('24년) 고금리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, 설비도입 지연으로 상반기 부진했으나, 하반기 들어 기계류·운송장비 모두 증가하며 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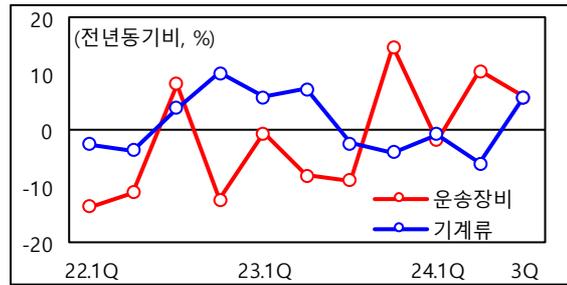
* 설비투자(전기비, %): ('23.3Q)△2.0 (4Q)2.8 ('24.1Q)△2.0 (2Q)△1.2 (3Q)6.5

설비투자 추이



* 출처: 한국은행

부문별 설비투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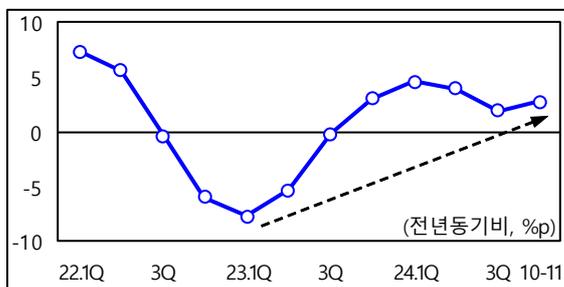
* 출처: 한국은행

- ('25년) 첨단업종 투자수요, 통화긴축 완화 등으로 증가 전망

- 기계류는 반도체 첨단공정 전환 수요, 운송장비는 '24년 이연물량의 순차적 도입 등으로 개선 예상
- 다만,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, 美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증가세 제약 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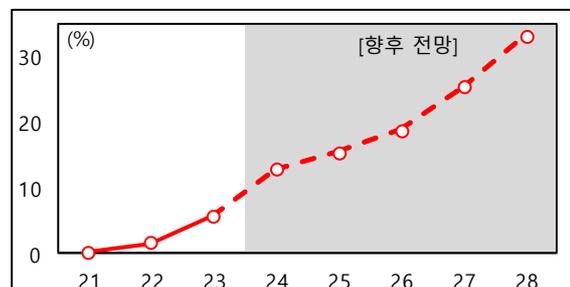
* 통관수출(전년동기비, %): ('24.1Q)8.0 (2Q)10.1 (3Q)10.5 (4Q)4.2

설비투자 조정압력(투자 선행지표)



* 출처: 통계청

HBM 매출비중 전망(전체 D램 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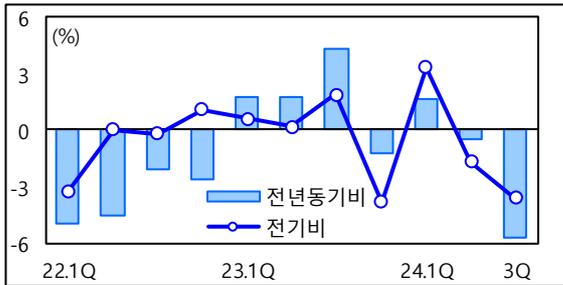
* 출처: Gartner

4 [건설투자] '24년 $\Delta 1.5\%$, '25년 $\Delta 1.3\%$ 감소 전망

○ ('24년) '23년 수주·착공 감소 영향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면서 건축 중심으로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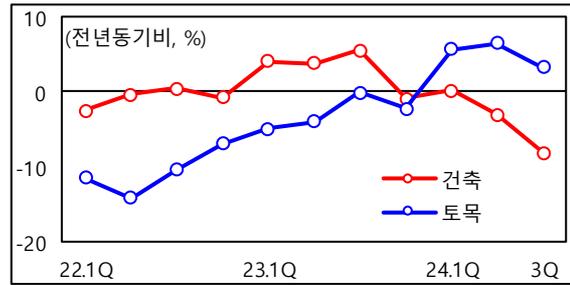
* 건설투자(전기비, %): ('23.3Q)1.9 (4Q) $\Delta 3.8$ ('24.1Q)3.3 (2Q) $\Delta 1.7$ (3Q) $\Delta 3.6$

건설투자 추이



* 출처: 한국은행

형태별 건설투자



* 출처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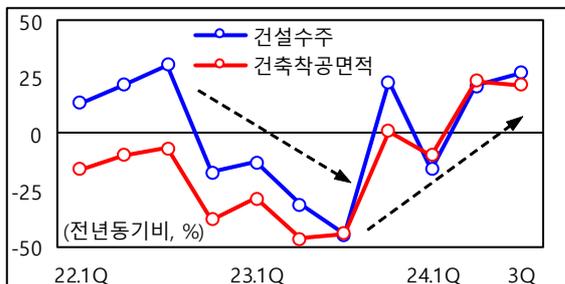
○ ('25년) 대체로 부진한 흐름이 예상되나, 최근 선행지표 개선 등으로 하반기 이후 점차 부진 완화 가능성

* 건설수주(전년동기비, %, 경상): ('23.上) $\Delta 23.3$ (下) $\Delta 13.6$ ('24.上)2.9 (3Q)27.0
 건축착공면적(전년동기비, %): ('23.上) $\Delta 38.5$ (下) $\Delta 24.1$ ('24.上)6.1 (3Q)21.5

▪ 건축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부진 지속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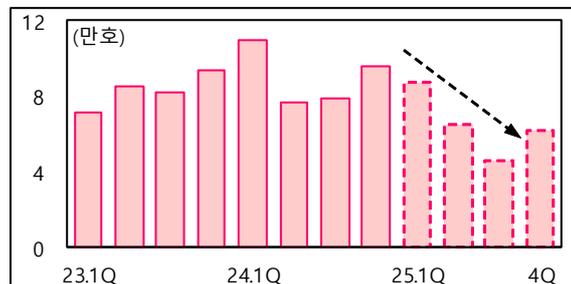
▪ 토목은 수도권 GTX,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사업 공사 실적이 반영되면서 감소폭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

건설수주·건축착공 현황



* 출처: 통계청, 국토교통부

APT 입주물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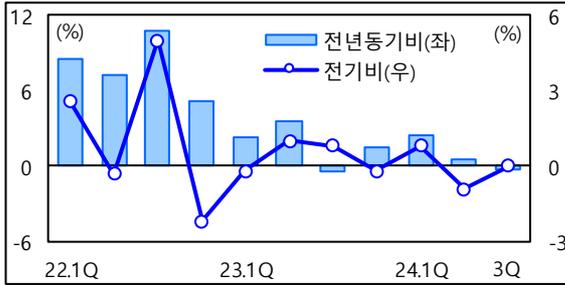


* 출처: R114

5 [지식재산생산물투자] '24년 0.6%, '25년 3.8%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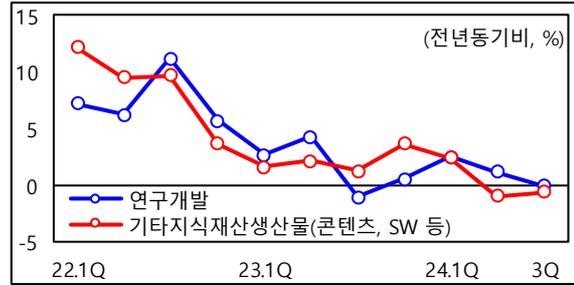
○ ('24년) 투자여력 축소 등으로 '23년에 이어 둔화 흐름 지속

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



* 출처: 한국은행

형태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



* 출처: 한국은행

○ ('25년) 정부 R&D 예산 확대, AI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, 고금리 완화 등으로 개선 전망

* R&D 예산(조원, 본예산 기준): ('24)26.5 → ('25)29.6 <전년 대비 +11.5%>

6 [수출입(통관)] 수출 '24년 8.2% 증가, '25년 1.5% 증가
수입 '24년 △1.6% 감소, '25년 1.6% 증가 전망

【수출: '24년 8.2% / '25년 1.5%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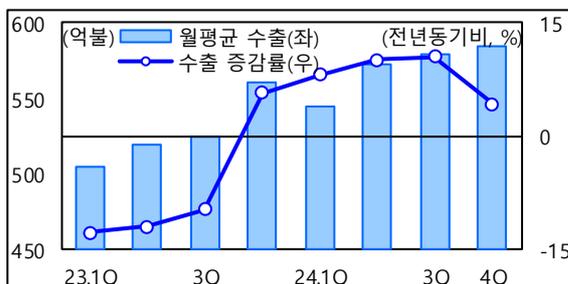
○ ('24년)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3분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, 주력업종 경쟁 심화 등으로 4분기 들어 둔화

* 범용 D램가격은 중국업체의 생산 확대 등으로 '24년 하반기 이후 하락('24.7월 2.10→12월 1.35\$)

▪ 최근 유가 하락,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도 석유제품·자동차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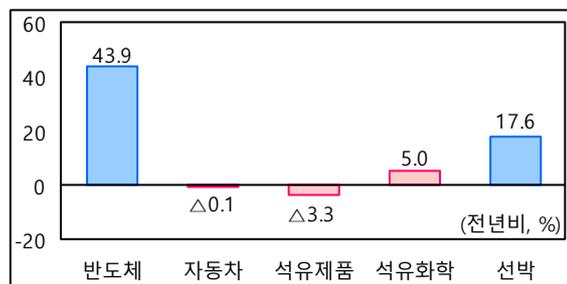
* 석유제품+화학 수출액(억불, 월평균): ('24.1Q)86 (2Q)83 (3Q)83 (4Q)75

수출액 및 수출 증가율 추이



* 출처: 관세청, 무역협회

'24년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



* 출처: 관세청, 무역협회

○ ('25년) 반도체 업사이클 조정, 美 정책전환 등으로 증가세 약화

* 메모리반도체 매출전망(전년비, %, WSTS): ('23)△28.9 ('24^e)81.0 ('25^e)13.4

- 고성능 반도체·조선 등은 양호한 흐름이 유지되겠으나, 범용 반도체·석유화학 등 경쟁심화 품목은 둔화 예상
- 美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 등에 따른 하방리스크 상존

【 수입: '24년 △1.6% / '25년 1.6% 】

○ ('24년) 원유·가스 등 에너지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

* 통관수입(전년동기비, %): ('23)△12.1 / ('24.1Q)△10.9 (2Q)△1.4 (3Q)6.2 (4Q)0.9

↳ '24년 부문별 수입(전년비, %): (에너지)△7.4 (비에너지)0.1

○ ('25년) 소비·설비투자의 완만한 개선으로 증가 전환이 예상되나, 국제유가 하락 등이 증가폭 제약

* 수입유발계수(산업연관표, '20년 기준): (소비) 0.195 (투자) 0.268 (수출) 0.321

** 국제유가(\$/b, 두바이유, 자체추정): ('22) 96 → ('23) 82 → ('24) 80 → ('25^e) 73

【 경상수지: '24년 900억불 / '25년 800억불 】

○ ('24년) 상품수지 호조에 힘입어 흑자규모 대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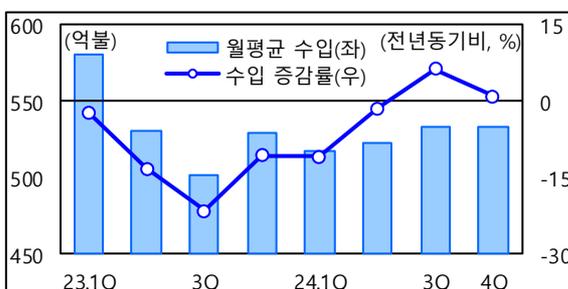
* 경상수지(억불): ('23) 355 / ('24.1Q) 168 (2Q) 212 (3Q) 264 (10) 98 [1-10월 742]

상품수지(억불): ('23) 341 / ('24.1Q) 189 (2Q) 256 (3Q) 253 (10) 81 [1-10월 780]

○ ('25년) 수출 증가세 둔화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,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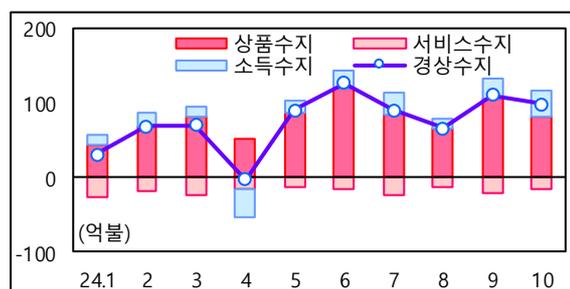
-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 지속 예상

수입액 및 수입 증가율 추이



* 출처: 관세청, 무역협회

경상수지 월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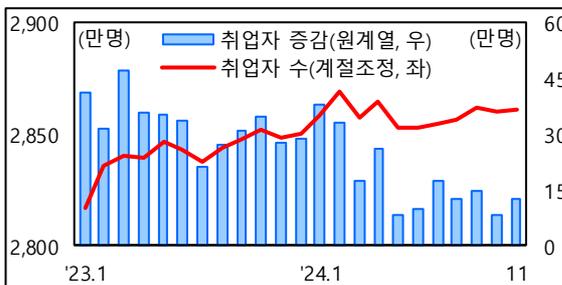
* 출처: 한국은행

□ 취업자수는 '24년 17만명, '25년 12만명 증가 전망

- ('24년) '22~'23년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했던 고용 증가폭은 건설업 감소세가 지속되며 2분기 이후 조정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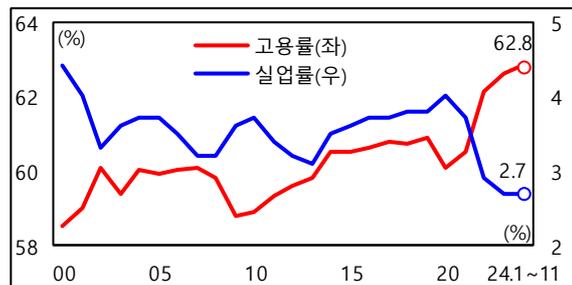
* 취업자수 증감(만명, 전년비): ('24.1Q)29.4 (2Q)14.6 (3Q)14.6 (10)8.3 (11)12.3
↳ 건설업 취업자: ('24.1Q)4.4 (2Q)△3.6 (3Q)△8.8 (10)△9.3 (11)△9.6

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



* 출처: 통계청

고용률·실업률 추이(15세 이상)



* 출처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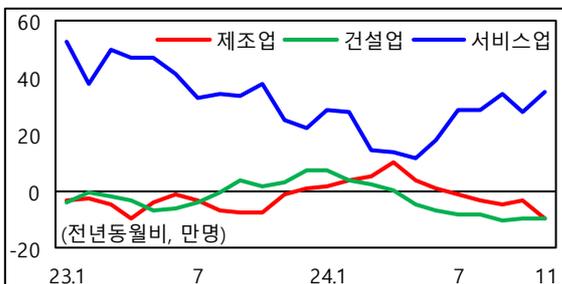
- ('25년)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,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'24년 대비 축소 전망

* 생산연령인구 증감(만명, 장래인구추계): ('23)△17.1 ('24)△24.4 ('25)△41.6

- 서비스업 고용은 IT·돌봄수요 확대로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, 건설업·제조업은 건설 부진·수출 둔화 영향으로 감소 예상
- 고용률(62.8%)은 여성·고령층 경제활동 확대로 높은 수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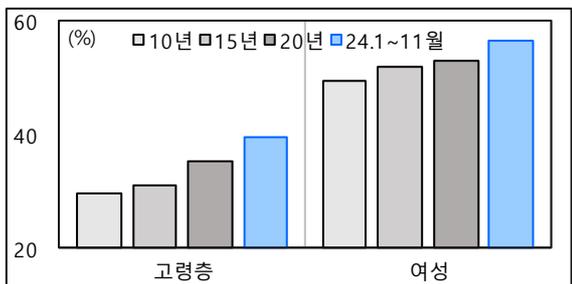
* 고용률(15세 이상, %): ('20)60.1 ('21)60.5 ('22)62.1 ('23)62.6 ('24^e)62.7 ('25^e)62.8

산업별 취업자수 증감



* 출처: 통계청

여성·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



* 출처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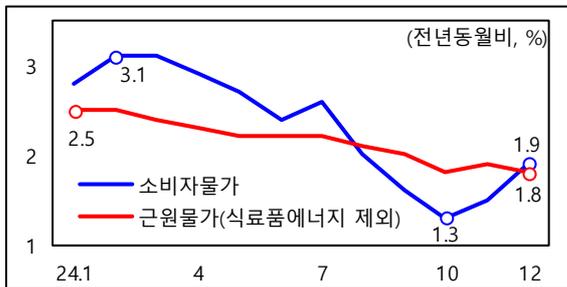
□ 소비자물가는 '24년 2.3%, '25년 1.8% 상승 전망

- ('24년) 상반기에 농산물·석유류 등 상방압력이 다소 확대되었으나,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측 요인 완화로 하향 안정세

* 농산물가격(전년동기비, %) : ('24.1Q)18.9 (2Q)17.6 (3Q)5.1 (4Q)1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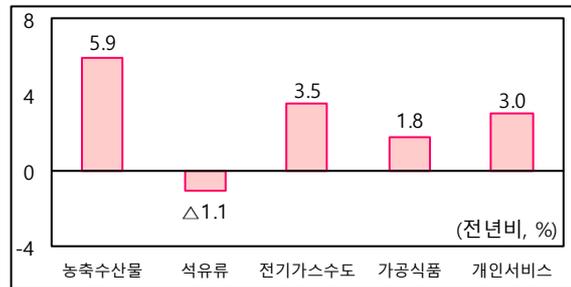
-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며 최근 2% 이내 안정 흐름

소비자물가·근원물가 추이



* 출처: 통계청

'24년 품목별 상승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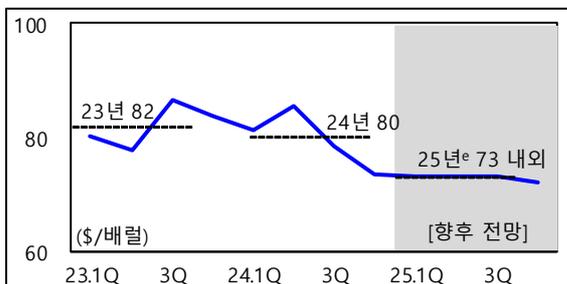


* 출처: 통계청

- ('25년) 둔화 흐름을 이어가며 '24년(2.3%)보다 낮은 1.8%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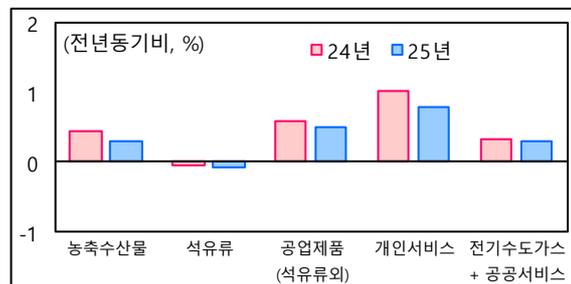
- 국제유가 등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, 경기적 요인에 따른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- 다만, 지정학적 리스크, 기상여건 등에 따른 원자재·농산물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 상존

국제유가 예상경로



* 출처: 페트로넷, 자체 추정

품목별 기여도 전망



* 출처: 자체 추정

2024~2025년 경제전망 요약

(전년동기비, %)

	'23년 실적	'24년				'25년 전망
		1/4	2/4	3/4	연간 ^e	
전망 전제						
세계경제*	3.3	-	-	-	3.2	3.2
Dubai 유가(\$/bbl)	82	81	85	78	80	73
실질 GDP	1.4	3.3	2.3	1.5	2.1	1.8
민간소비	1.8	1.0	0.9	1.4	1.2	1.8
설비투자	1.1	△1.0	△2.5	5.9	1.3	2.9
건설투자	1.5	1.6	△0.5	△5.7	△1.5	△1.3
지식재산생산물투자	1.7	2.5	0.5	△0.2	0.6	3.8
경상 GDP	3.3	7.3	7.2	5.0	5.9	3.8
취업자 증감(만명)	32.7	29.4	14.6	14.6	17	12
고용률(15세 이상, %)	62.6	61.6	63.3	63.3	62.7	62.8
소비자물가	3.6	3.0	2.7	2.1	2.3	1.8
경상수지(억달러)	355	168	212	264	900	800
상품수지(억달러)	341	189	256	253	950	860
수출(통관)	△7.5	8.0	10.1	10.5	8.2	1.5
수입(통관)	△12.1	△10.9	△1.4	6.2	△1.6	1.6
서비스·본원·이전 소득수지(억달러)	14	△21	△44	11	△50	△60

* IMF World Economic Outlook ('24.10월)

1. '25년 1분기 주요 추진과제

(1) 1월 추진과제 - 47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인하	기재부
·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연초 시행 및 기업할인 보조금 한시 확대	환경부
· K-ETA 한시 면제기간 1년 연장	법무부·문체부
·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한 방한관광 붐업 추진	문체부
· 뉴:홈 10만호 공급 및 공공주택 등 13.8만호 착공	국토부
·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	국토부
· 신축매입임대 '24~'26년간 15만호 공급, 3만호 상반기 조기 약정체결	국토부
· 과일류 10종 할당관세 적용	기재부
· 신선비축체계 구축	농식품부
· 착한가격업소 확대	행안부
· 기존 양식장 → 김 양식업 전환 허용 및 계약재배 시범사업 실시	해수부
· 내신기출문제 공개범위 확대 및 공개방식 명확화	교육부
· 11조원 규모 서민정책금융 공급	금융위
· 서민정책금융 대출한도 확대 조치 연장	금융위
· 신용회복위원회 신속·사전 채무조정 특례 연장	금융위
·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한도 상향	금융위
·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	복지부
·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 청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	교육부
·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10개소 추진	국토부
·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상생방안 시행	공정위
· 온누리상품권 카드형·모바일형 할인을 상향	중기부
· 가칭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	고용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취약근로자·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강화	고용부
· 디지털·첨단분야 직업훈련 지원 강화	고용부
· 지역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	고용부
·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	한국은행
·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 운영	금융위
·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단계적 정상화	금융위
· 일반주주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	금융위
· 국채투자 인프라 개선 및 글로벌 판매모델 도입	기재부·금융위
· 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 및 전자거래시스템 활성화	기재부
· 외환거래 결제시한 연장	기재부
· RFI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위반 계도기간 연장	기재부
· PF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	국토부·금융위
·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	중기부
·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	기재부
·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패키지 연장	국세청
· 환변동보험 한도 확대 조치 연장	산업부
· 수출전시회, 컨퍼런스 등을 계기로 수출상담회 상시 진행	기재부
· 공급망기금 500억원 민관 공동투자 추진	기재부
· 공급망기금 3년간 30조원으로 확대	기재부
· 이차전지 기업 정책금융 확대 추진	금융위
·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핵심기반시설 국비 지원	산업부
· 전기·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	환경부
· 자동차 부문 저리 정책금융 지원 확대	금융위
·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	기재부·환경부
·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마련	중기부

(2) 2월 추진과제 - 34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상반기 추가소비분 추가 소득공제 추진	기재부
·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감면	기재부
·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환급지원율 확대	산업부
·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	문체부
· LH·지역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	기재부
·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배제 1년 한시 연장	기재부
·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	기재부
·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	기재부
· 기회발전특구 이전·창업하는 중소·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추진	기재부
· 민간 해외농업개발 금융지원 강화	기재부·농식품부
· 대환대출시에도 전세대출금 소득공제 혜택 유지	기재부
· ‘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·학교’ 확대	교육부
· 공공부문 고졸채용 인센티브 확대	기재부
· 백년가게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	기재부
·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	기재부
·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 임의해지시 해약환급금 저율과세	기재부
· 영세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'25년 한시 인상	기재부
·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	기재부
· 배당 증가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	기재부
· ISA 세제지원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	기재부
· 연기금투자플 제도 개편방안 마련	기재부
·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	기재부
·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부여	기재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외국인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감면기간 확대	기재부
· 반도체 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	기재부
· 방산 MRO 협의체 구축 및 합정·항공기 MRO 수행범위 확대	국방부·방사청
· 해외 우수인재 소득세 50% 감면(10년) 적용	기재부
· '25년 한시 중소·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진	기재부
·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	기재부
·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	기재부
· 첨단 R&D용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	기재부
·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대상 확대	기재부
·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	기재부
· 주류제조 규제 완화 추진	기재부

(3) 3월 추진과제 - 49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 배포	문체부
· 동행축제 연 3회 이상 개최	중기부
· 여행가는 달 조기 시행	문체부
·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	문체부
· 국제미식행사 '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' 국내 개최	농식품부
· 3기 신도시 1.2만호 착공 및 0.8만호 분양	국토부
· 공공 공사비 현실화	기재부·국토부
·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보완	중기부
· 개발부담금 감면	국토부
· 건축물 탄력적 용도전환 지원 검토	국토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HUG 자본출자를 통한 공적보증 확대	국토부
· 공공심야약국 확대	복지부
· 늘봄학교 확대	교육부
·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시행	과기부
·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	과기부 등
·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 마련	금융위
· 민간·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	기재부 등
· 빈일자리 업종 청년취업 지원	고용부
·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	교육부
·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확대	고용부
· 중장년 인턴제 사업 신설	고용부
·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추가 확대(~'24.11월 사업영위자)	금융위
·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추진	금융위
· 휴일제 개선방안 마련 추진	기재부
· 영세 훈련기관 전문화·규모화 등 연구용역	고용부
· 상장폐지 절차 개선	금융위
· 공매도 제도개선 완료	금융위
·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한도 및 국비분담비율 상향	산업부
· 수출다변화, 기간산업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마련	기재부·산업부
·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지투 보조금 지원 확대	산업부
·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패키지 지원	산업부
·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 신설	기재부
· 대미 통상 대응체계 구축·운영	산업부
· MRO 韓·美 협력 패키지 마련	산업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조선업 E-7 외국인력 허용비율 특례 상시화	법무부
·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방안 마련	산업부
· 자동차 민관 합동대응반 구성 및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	산업부
· 시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 수립	기재부·과기부
· 중소기업 AI 활용 확산 방안 마련	중기부
·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 혁신전략 수립	복지부
· FAST 육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	과기부
· 신규 서비스 무역통계 공표	한국은행
·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 마련	산업부
· 민관합동 탄소크레딧 시장TF 구축 및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	환경부 등
· 국토이용 효율화 연구용역 추진	국토부
· 대규모 영농지대 조성사업 추진	농식품부 등
· 농지 규모화를 위한 공동영농 활성화 지원	농식품부
· 국가 R&D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	기재부
· LP 첫걸음펀드 출자시 인센티브 제공	중기부

2. '25년 2분기 주요 추진과제 - 52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	기재부 등
· 듀티프리페스타 연 2회 개최(4·10월) 및 기간 확대	관세청
·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시행	문체부
·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상반기 조기집행	국토부
·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로드맵 수립	국토부
· 신규택지 3만호 후보지 발표	국토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공공임대주택 매입가격 10% 인상	국토부
·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	국토부
·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	국토부
·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대해 완화	행안부
· 지자체별 공공요금 현황, 내역 분석 후 공표	행안부
·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확대	고용부 등
· 민간부문 고졸채용 인센티브 확대	고용부 등
· 사회통합전형 제도개선	교육부
·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취약계층 우대방안 신설 검토	교육부
· 자산형성 프로그램-주거지원 연계 강화	국토부
· 청년도약계좌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허용 검토	금융위
· 청년내일저축계좌 성실납입 인센티브 부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	복지부 등
·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 및 리모델링 후 청년 창업공간 등 활용	국토부
·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	고용부 등
· 중장년고용플래너 통한 중장년 경력설계·전직지원	고용부
· 새출발기금 취업, 재창업 교육 이수시 추가 상환유예 부여 검토	금융위
· 골목형상점가 밀집요건 완화	중기부
· 고용보험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	고용부
· 평생학습휴가 도입기업 인센티브 검토	고용부
· 대고객외국환중개회사 허용 등 중개 인프라 선진화	기재부
·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시 인센티브 부여	산업부
·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신규 도입	기재부
· 제3국 시장 공동진출, 상호투자 확대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	기재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외투 보조금 지원 확대	산업부
·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	산업부
· 공급망기금 핵심광물에 대해 민간 공동투자 추진	기재부
· 공급망기금, 민간 직접투자에 대한 해외투자보험	산업부
· 소부장특별회계 지원사업 범위 확대	산업부
·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 예타 진행	산업부·과기부
·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 수립	산업부
·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 현실화, 신속 지정	산업부
· 석화업계 컨설팅 용역 추진 및 석화산업 추가 지원방안 마련	산업부
· AI 핵심인재 양성 확보 방안 마련	과기부 등
· ^{가칭}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	과기부
·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	과기부
· 양자 공동연구거점 지정	과기부
· 경제·사회 친환경화 대응 기후테크 서비스업 육성방안	환경부
· 아세안, 중동 전략지역별 디지털 수출개척단 추진	과기부
·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(SaaS) 판로확보	과기부
·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(SaaS) 무역장벽 대응 지원	과기부
·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	환경부
·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	산업부
· 해외 우수과학자, AI 석학 등 유치, 정착지원 확대	과기부
·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	기재부
· 농촌 체류형 쉼터 확산	농식품부
· 산림속 휴양시설 확충방안 검토	환경부 등

3. '25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- 48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고용관련세제 개편 추진	기재부
·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개선	기재부
· 코리아세일페스타 역대 최대규모 개최	산업부
· 분양가 산정시 택지가산비·건축가산비 항목 추가 반영	국토부
· LH 지연손해금률 인하 추진	국토부
·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청년특별공급 신설	국토부
· HUG 공적보증 확대 및 정부출자	국토부
· 산단내 부대시설 범위 확대	산업부
·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(SMP) 도입	산업부
·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방안 마련	복지부
· 수요 변화를 반영한 농업관측모델 개발	농식품부
· 계약재배 수단계 온라인화 추진	농식품부
·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	기재부
·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특별공급시 뿌리산업 재직자 가점 확대	중기부
·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상시화	산업부
· 가족돌봄청년·고립은둔청년 통계 신규 개발	통계청
·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고졸채용 만점 비율 상향	기재부
· ISA 1인 1계좌 규제 폐지, 다계좌 허용방안 마련	기재부·금융위
·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절차 간소화	국토부
· 저소득층의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	복지부
· 45+ 생애전환 경력설계 프로젝트 추진	고용부
·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추진	고용부
· 공공신탁 도입 검토 및 민간신탁 활성화	복지부·금융위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중소기업 재직자의 타업종 사내대학, 대학원 입학 허용	고용부
· 기초생보 근로·사업소득 공제율 차등 적용 추진	복지부
·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 활용도 확대	기재부·한은
·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방안 마련	금융위
· 국채 활용성 확대	기재부·예결원
· 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	금융위
· 도산제도 운영방안 개선 추진	법원·법무부
· 송전선로 지중화비용 분담 및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 상향	기재부
· 고부가 특수강 개발을 위한 신규 R&D 프로젝트 기획	산업부
·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및 양자종합계획 마련	과기부
· 콘텐츠 글로벌리그 펀드 조성	문체부
· 콘텐츠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	문체부
· 에너지 분산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및 편의성 강화	산업부
· 수소특화단지 단계적 확대 검토	산업부
· 녹색분류체계 개정	환경부
·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	환경부·금융위
· 2035 NDC 마련	환경부
·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조세부담 완화방안 마련	기재부
· 재외한인을 국내외 인재 기술 교류의 상설 민간대사로 활용	재외동포청
· 항만 스마트화 펀드 조성	해수부
· 용산국제업무지구 고밀개발·정주여건 개선 추진	국토부 등
· 농촌지역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	농식품부
· 중소기업 M&A 활성화 방안 마련	중기부
· 가칭기업승계법 제정 추진	중기부
· 기술사업화 전략 마련	산업부·과기부